# 충청남도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체계

2015.

미래전략연구단 공공투자연구팀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목 차>

Ⅰ. 대형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체계의 필요성 ····· 1

1. 국책사업의 중요성 ····· 1
2. 대형 국책사업 추진 현황 ····· 2
3. 대형 국책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 ····· 3

Ⅱ. 대형 국책사업 개념 및 구분 ····· 7

1. 대형 국책사업 개념 ····· 7
2. 국책사업의 구분 ····· 8
   1)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에 의한 구분 ····· 8
   2)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에 위한 사업 유형 ····· 8
   3) 대형 국책사업 발굴상의 범위 및 대상 사업 ····· 9

Ⅲ.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이해 ····· 10

1. 국책사업 추진 절차 ····· 10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관 ····· 15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 16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16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 16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시기 ····· 18

1)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 18
2)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시기 ····· 19
**5.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절차 ····· 20**
1) 건설사업 및 기타재정사업 ····· 20
2) 국가연구개발(R&D)사업 ····· 22
6.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 23
1) 건설 및 기타재정사업의 경우 ····· 23
2) 국가연구개발(R&D) 및 정보화사업의 경우 ····· 32

Ⅳ. 타시도의 국책사업 대응사례 검토를 통한 충남의 문제점과 과제 도출 ····· 46

**1. 타시도 국책사업 대응체계 사례 검토 ····· 46**
1) 서울시「공공투자관리센터」설치운영 ····· 47
2) 충청북도「공공투자관리센터」설치운영 ····· 47
3) 전라북도「국책사업발굴단」설치운영 ····· 48
4) 부산광역시「공공투자분석센터」설치운영 ····· 53
**2. 사례 검토 요약 및 시사점 ····· 56**
1) 사례 검토 요약 ····· 56
2) 시사점 ····· 56
**3. 충남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과제 ····· 57**
1) 충남 주요 기관별 역할과 기능의 한계 ····· 57
2) 충남 국책사업 추진과정 각 단계별 문제점과 과제 ····· 60

Ⅴ. 충남 대형 국책사업 대응체계 ····· 62

**1. 충남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지원체계 구축 ····· 62**
1) 충남 공공투자 유치지원 및 관리센터(CAMP)의 설치 ····· 62
2) 충남 공공투자 유치지원 및 관리센터의 기능 ····· 63
3) 충남 공공투자 유치지원 및 관리센터 주요 사업 ····· 65

4) 충남 대형 국책사업 추진 절차 개선(안) ····· 68
5)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 기관별 역할 분담 ····· 69
2. 도내 공공투자 사업 관리 강화 ····· 70
3. 공공투자 유치지원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 71
1) 인력구성(안) ····· 71
2) 예산(안) ····· 72
3) 추진계획(안) ····· 72
4. 충남 국책사업발굴단 운영계획(안) ····· 73
1) 추진체계 ····· 73
2) 국책사업발굴단 운영주체 및 주요 역할 ····· 74

# Ⅰ. 대형 국책사업 대응체계 필요성

## 1. 국책사업의 중요성

○ 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성과를 고르게 분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 특히 지역발전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표출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도정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다양한 지역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 이용가능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정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게 된다.

○ 따라서 충남 도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내부적으로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개별 사업들에 대한 분석 및 사전평가 등의 작업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후 진행되는 사업들은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평가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외부적으로는 부족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추가적인 세원의 확보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유치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세원의 발굴과 징수는 제한이 많으므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국책사업의 유치 및 확보는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그리고 이 외에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계획 또는 정책 사업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포함됨으로써, 도정 운용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효과는 발현되기 때문이다.

- 그리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을 국책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도내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집중과 효율적 관리는 가능해 지는 것이다/

○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형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작업과, 그리고 충청남도 차원에서 수행되는 각종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2. 대형 국책사업 추진 현황[1)]

○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2010년부터 2013년간 지자체별 대형 국책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을 정리해 보면 부록에 제시된 바와 같다.

○ <부록 표 1>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로 <부록 표 1>에서 도로와 철도 등의 SOC 사업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SOC가 단일 지자체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보다 광역적인 사업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 같은 기간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2현재 3건의 R&D분야의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 이 외에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이 발굴 및 추진 중인 상태이나, 앞서 밝힌 이유로 여기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1) 본 절과 다음 제 3절의 내용은 2015년 8월 현재 계속 보완조사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임

○ 제시된 충남의 예들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에서 탈락된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처럼 충청남도에서는 국책 사업 발굴 및 추진, 논리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 충남의 R&D 분야 국책사업 발굴 추진현황

| 사업명 | 추진 기간 | 추진 주체 | 추진 경과 | 용역업체 |
|---|---|---|---|---|
|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 조성사업 | 2012년 ~ 2013년 | 충남 TP | 예타 진행 중 | - |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실용화 및 산업기반육성 | 2012년 ~ 2013년 | 충남 TP | 예타 대상사업 선정 탈락 | 자동차부품 연구원 |
| OLED 주조명 신산업화 | - | - | 탈락/종료 | - |

○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면이 있으나, 아쉽게도 탈락의 원인을 파악하는 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예타대상 사업 선정과정에 탈락한 경우에도, 이후 타당성 제고를 위한 사업내용의 변경과 조정을 통해 다시 제출될 여지는 존재한다.

○ 따라서 실패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시행착오 과정에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국책사업 준비 단계에서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 및 실패의 원인분석에 대한 검토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 정리되고 취합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3. 대형 국책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으며, 대체적으로 도 단위 행정구역의 재정자립도가 광역시들의 재정자립도에 비해 크게 낮다.

-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일부 광역시들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시도들에

서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역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형 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 2013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6.0%로 전국평균 51.1%보다 뒤떨어지는 열악한 상태라 할 수 있다.

- 충청남도는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정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부족의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대형 국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광역시도별 재정자립도

(단위: %)

| 구분 | 2001년 | 2007년 | 2013년 |
|---|---|---|---|
| 전국 평균 | 57.6 | 53.6 | 51.1 |
| 서울특별시 | 95.6 | 90.5 | 88.8 |
| 부산광역시 | 74.4 | 62.9 | 56.6 |
| 대구광역시 | 75.3 | 63.9 | 51.8 |
| 인천광역시 | 77.7 | 69.8 | 67.3 |
| 광주광역시 | 63.6 | 54.2 | 45.4 |
| 대전시 | 74.9 | 72.1 | 57.5 |
| 울산시 | 76.4 | 68.4 | 70.7 |
| 세종특별자치시 | n.a. | n.a. | 38.8 |
| 경기도 | 78.0 | 74.9 | 71.6 |
| 강원도 | 29.8 | 28.3 | 26.6 |
| 충청북도 | 36.5 | 33.3 | 34.2 |
| 충청남도 | 30.5 | 36.9 | 36.0 |
| 전라북도 | 27.7 | 23.5 | 25.7 |
| 전라남도 | 22.0 | 20.1 | 21.7 |
| 경상북도 | 31.3 | 28.9 | 28.0 |
| 경상남도 | 39.5 | 39.1 | 41.7 |
| 제주특별자치도 | 33.6 | 26.4 | 30.6 |

-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 n.a.: not available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책사업 추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남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진단과 타시도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한 본 보고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Ⅰ. 서 론 |
|---|
| ○ 국책사업의 중요성<br>○ 최근 대형 국책사업 지자체 추진현황<br>○ 대형 국책사업 추진의 필요성 |

⇩

| Ⅱ. 대형 국책사업의 개념 및 대상사업 |
|---|
| ○ 대형 국책사업 개념<br>○ 대형 국책사업 대상사업 |

⇩

| Ⅲ.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이해 |
|---|
| ○ 국책사업 추진절차<br>○ 예비타당성조사 개관<br>○ 사업유형별 추진절차 및 주요 쟁점 사항<br>- 건설사업, 도로·사업, 연구개발사업 |

⇩

| Ⅳ. 타시도 대형 국책사업 추진사례 검토를 통한 충남의 문제점과 과제 |
|---|
| ○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 사례<br>○ 부산광역시 공공투자분석 센터 사례<br>○ 타지역 국책사업 대응체계 검토 및 시사점<br>○ 충남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과제 |

⇩

| Ⅴ. 충남 대형 국책사업 대응체계 개선(안) |
|---|
| ○ 충남 대형 국책사업 성공적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br>○ 충남 공공투자유치지원센터(CAMP) 설치 및 운영계획 |

| 부 록 |
|---|
| ○ 1~4차 워크숍 자료<br>○ 사업계획서 제출양식 |

(그림 1) 보고서 구성

○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개념과 그 유형구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 이 과정을 통해 충청남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가능해지며, 준비 중인 대응체계의 구체적 기능이 설명될 수 있다.

○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절차와,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이해가 제공된다.

- 여기서는 특히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의 진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제공된다.

○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이루어진 국책사업 유치노력과 그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충청남도의 성공적인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시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 이 과정을 통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체계의 조직과 정비의 필요성이 설명된다.

○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체계(안)으로서 충남 공공투자 유치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된다.

# Ⅱ. 대형 국책사업 개념 및 구분

## 1. 대형 국책사업 개념

○ 대형 국책사업은 사업의 종류나 특성, 기능 등의 분류에 의한 정의라기보다는 사업규모,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한 행정적인 용어라 볼 수 있다.

○ 다양한 문헌을 통해 확인된 국책사업의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김현주 외(1999)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란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그리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과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서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 관리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다.
- 이 외에도 「201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중장기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순수 대형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있다.

○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방법, 절차 등은 필수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 특히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수행하여야 한다[9쪽 (그림 2) 참조].

## 2. 국책사업의 구분

### 1)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에 의한 구분

○ 「201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의하면 국책사업을 순수 대형 국책사업, 지역참여형 국책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국고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순수 대형 국책사업은 중장기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공모절차 없이 중앙부처에서 직접선정 하여 추진되는 사업이고, 지역참여형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이다.
-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관련법령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자치단체 대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가급적 자치단체·산업계에 선정을 위임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국고지원사업의 경우는 주로 투융자심사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표 3>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에 따른 구분*

<table>
<tr><th>사업구분</th><th>사업 내용</th><th>총사업비</th><th>사업비 부담</th></tr>
<tr><td>공약사업(숙원사업)</td><td rowspan="6">- R&D 사업<br>- 非R&D 사업</td><td rowspan="6">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br>- 예비타당성조사 대상<br><br>총사업비 500억원 미만<br>- 투융자심사 대상</td><td rowspan="5">중앙정부<br>(+지방자치단체)**</td></tr>
<tr><td>순수 대형 국책사업</td></tr>
<tr><td>지역참여형 국책사업</td></tr>
<tr><td>지역균형 발전사업</td></tr>
<tr><td>국고지원사업</td></tr>
<tr><td>도 사업비 지원사업</td><td>도+시군매칭</td></tr>
</table>

* 기획재정부(2014), 『2014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안 작성지침』에 의거 분류
** 전액 중앙정부 부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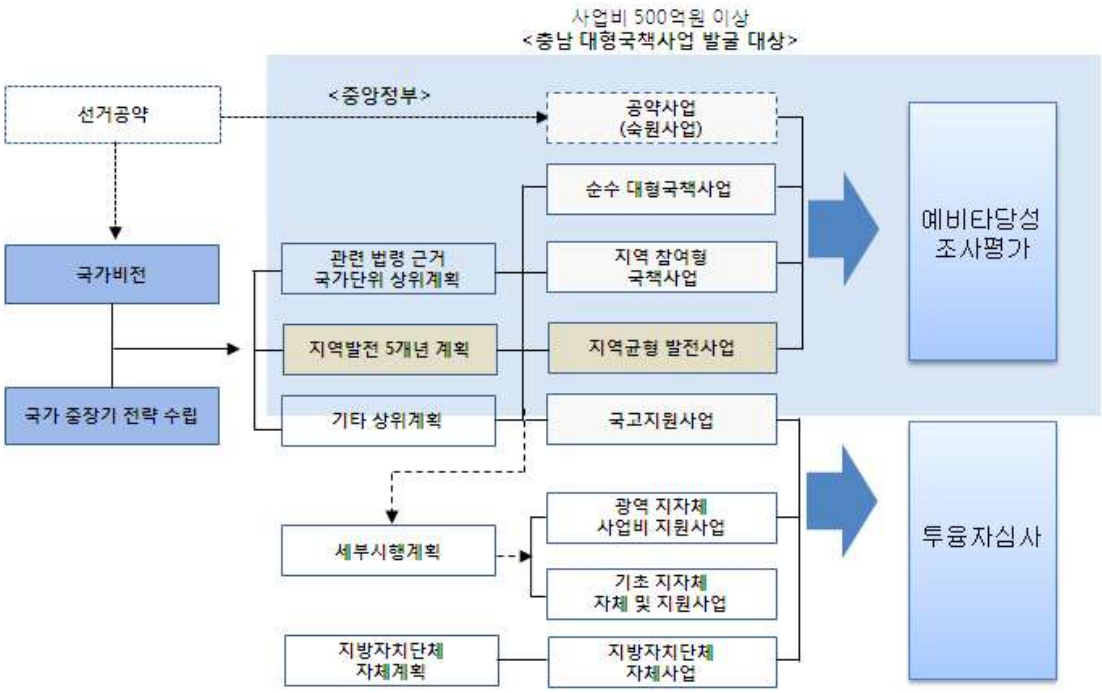
### 2)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에 위한 사업 유형

○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에 의한 사업 구분은 다음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에 따른 국책사업 구분

| 사업구분 | | 사업 내용 |
|---|---|---|
| 건설사업 | |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 |
| 정보화사업 | |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 시스템구축사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 |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연구단지조성사업 |
| | 순수 R&D 사업 | 연구기술개발 사업 |
| 기타재정사업 | | 보건·교육·노동 등 중기재정지출 사업 |

- 자료: 기획재정부(201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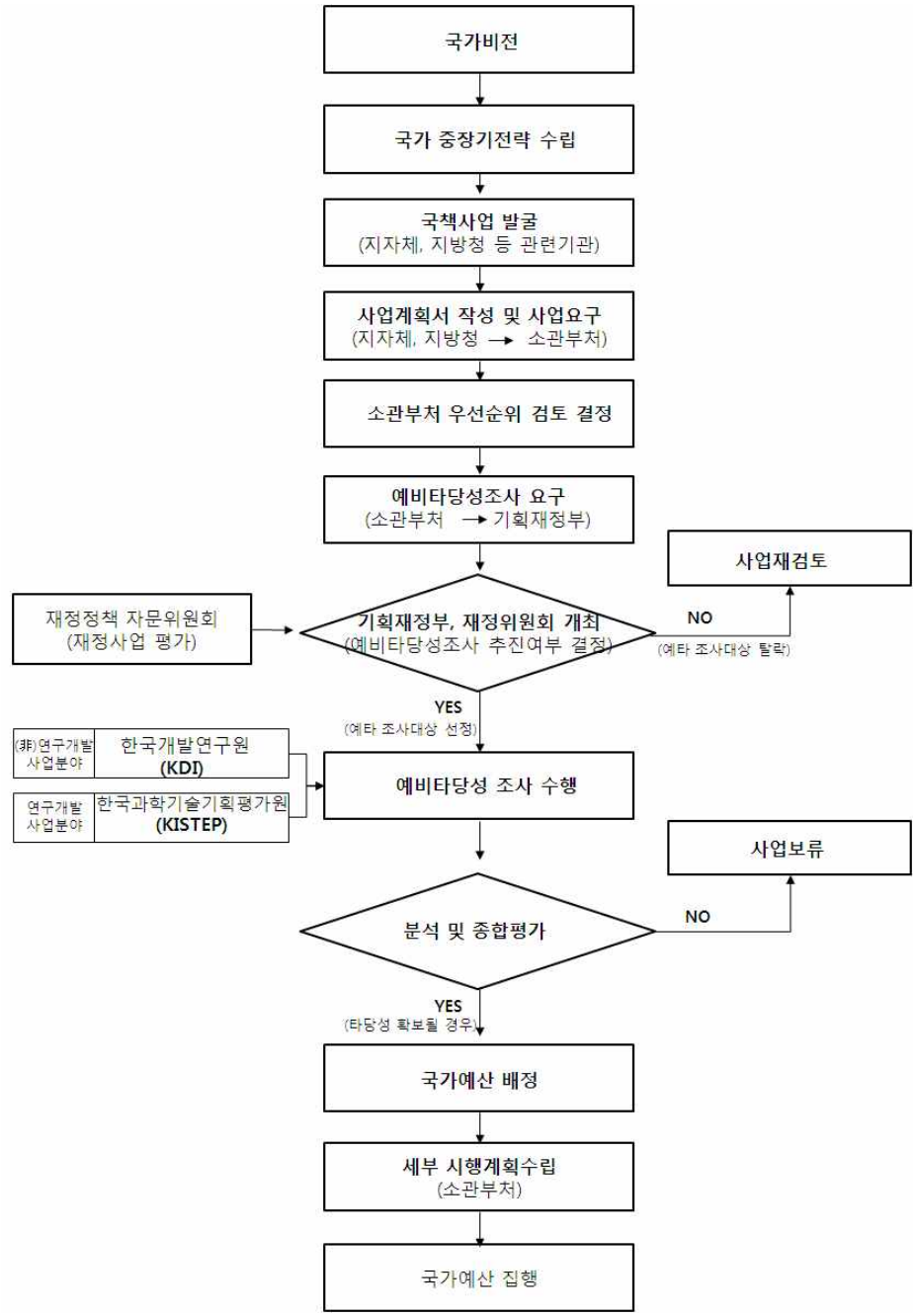

(그림 2) 대형 국책사업 발굴상의 범위 및 대상사업

### 3) 대형 국책사업 발굴상의 범위 및 대상 사업

○ 이 외에도 대형 국책사업은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기금보조·지원을 받는 사업중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재정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한다.

# Ⅲ.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이해

## 1. 국책사업 추진 절차




(그림 3) 일반적인 국책사업 추진 절차

○ (그림 3)은 500억 이상, 국고지원 300억 이상인 국책사업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포함된 일반적인 추진 절차이다.

- 국책사업 추진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사업구상 → 사업계획서작성 및 요구단계→예비타당성조사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수행 → 세부시행계획수립(기본계획, 실시설계) → 국가예산집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는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기능, 입지, 시설 등을 개략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 이 과정을 통해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총사업비가 산출된다.

○ 둘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요구' 단계는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고 지자체 또는 지방청에서 중앙 소관부처에 사업을 요구하는 단계이다.

○ 셋째,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단계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자체, 공단, 관계청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매년 2회(7월, 11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단계이다.

- 참고로 이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명시되어할 사항은 다음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5>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포함 내용

| 사업유형 구분 | | 반드시 포함할 내용 |
|---|---|---|
| 건설·정보·기타 사업 | 건설사업 | • 사업예정부지<br>• 주요노선(도로·철도)<br>• 관련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br>• 기타 상위계획 반영여부<br>• 향후 시설활용 계획 |
| | 정보화 사업 | • 정보서비스 목적과 내용<br>•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br>• 시스템 구축의 범위<br>• 정보시스템 활용계획 |
| | 기타재정 사업 | • 사업목적<br>• 구체적인 지원 대상<br>• 지원 금액, 지원율<br>• 사업진행 절차<br>• 전달체계 등 |
| 국가 연구개발사업 | | • 사업추진체계<br>• 소요자원(예산, 인력, 장비) 규모 및 확보방안<br>• 기존사업과의 차별성<br>• 연계방안<br>•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

- 자료: 기획재정부(201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넷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단계는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

- 타당성조사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경제성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검토하게 된다.

○ 다섯째, '세부시행' 단계에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주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단계에서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중앙부처 소관부서에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이후 기본설계가 진행되며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한다.

- 실시설계 단계는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까지 진행하게 된다.

○ 정보화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획재정부 이외 별도의 위원회에도 요구서를 제출해야한다.

- 구체적으로 정보화사업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워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에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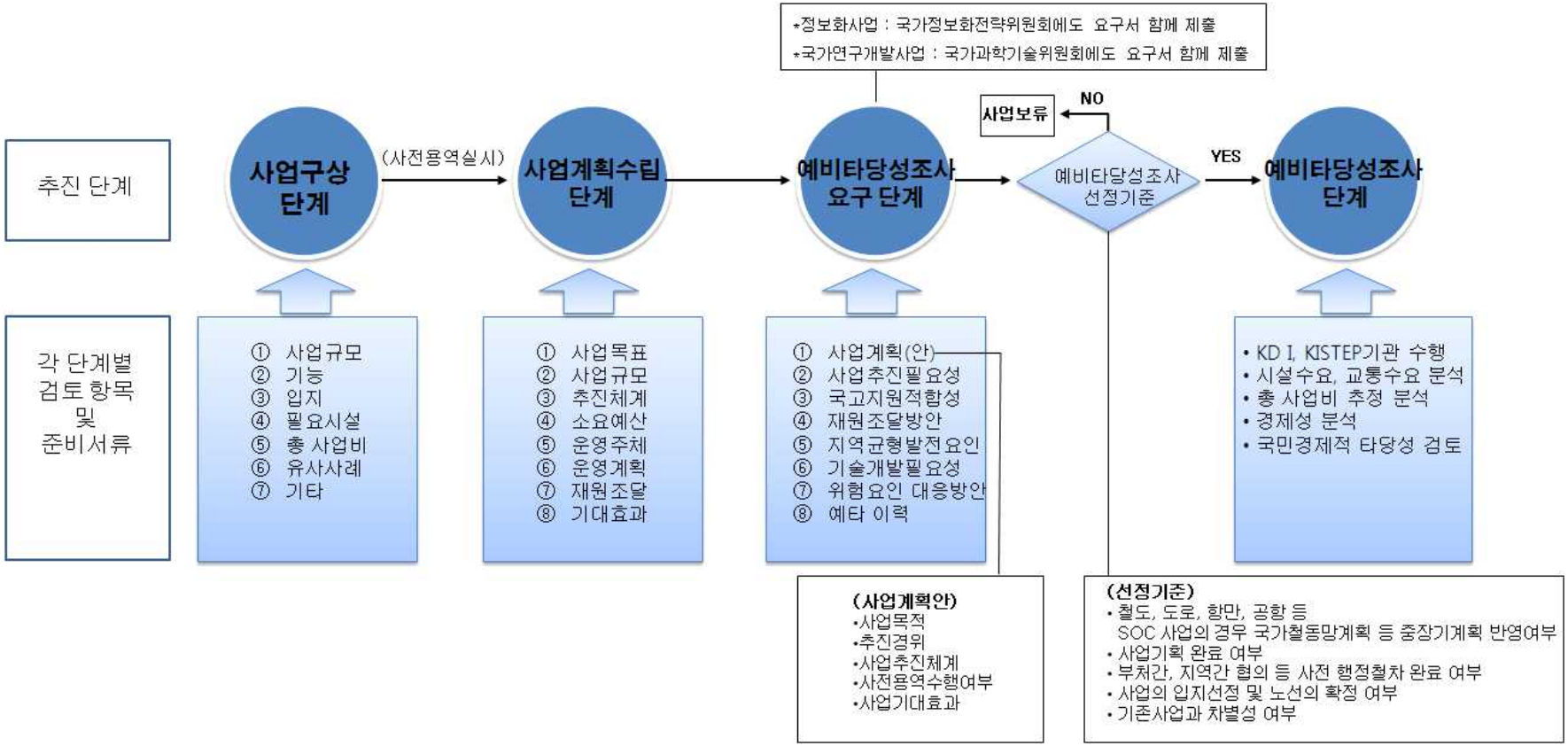
○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 투자되는 연구기반구축사업을 지자체에서 기획·제안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 등 입지적성 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연구개발사업 유형별 검토 제출서류는 다음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6>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별 검토 제출 서류

| 국가연구개밥사업 유형 구분 | 제출 서류 |
|---|---|
| 순수 R&D 사업 | • 기존사업 중복성 검토의견서 제출<br>- 국과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조회<br>-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조회 |
| 연구기반구축 사업 | • 공사비단가, 장비구입비, 설계비, 공종별 사업비 |

○ 대형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단계별 주요 검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 4)에 요약 정리된 바와 같다.




(그림 4) 대형 국책사업 추진 단계별 기본 제출 내용

##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관

○ 참고로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국책사업절차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특정한 사업일 경우「국가재정법」에서 면제사업 규정을 두어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받을 경우에도 국책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기관의 수행주체가 달라지기도 한다.

-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이외 건설사업, 기타재정사업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수행한다.

○ 이와 같이 국책사업의 내용, 사업규모에 따라 제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제도로,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여 검토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국가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으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편성이 가능하게 되는 제도이다.

○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국가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운용지침[2)]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정의와 목적, 예비타당성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분석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2) 기획재정부(2012), 「예비타당성조사운영지침」

##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사업,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사업비 규모에 대한 제약은 정보화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공히 적용된다.

○ 그밖에도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관광, 환경,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신규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표 7>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
|---|---|
| 1.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고지원 300억 이상 신규사업<br>(1) 토목, 건축 등 건설사업<br>(2) 정보화사업<br>(3) 국가연구개발사업<br>(4) 민간투자사업<br>- 단, 민간제안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로 대체<br><br>2. 중기재정지출 500억 이상인 신규 재정사업<br>(1) 사회복지<br>(2) 보건<br>(3) 교육<br>(4) 노동<br>(5) 문화 및 관광<br>(6) 환경보호<br>(7) 농림해양수산<br>(8) 산업·중소기업 |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br>(2) 문화재 복원사업<br>(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구하는 국방 관련 사업<br>(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br>(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br>(6)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안정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br>(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br>(8)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br>(9)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 자료: 기획재정부(2012),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공동구 설치(전기, 가스, 상하수도)등을 말함
**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 사업 등을 말함

##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시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분류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구체성, 시급성 등이 미흡할 경우 대상 사업 선정에서 탈락시킨다.

○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대상사업 선정(안)을 마련하고 재정정책 자문회의와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1)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세부 내용은 다음 <표 8>에 정리된 바와 같다.

○ 이와 같은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 반면 대상사업에서 최종 탈락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은 보류하게 된다.

<표 8>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중장기계획 부합성 | • 도로·철도부문 등 중장기 상위계획 반영여부<br>• 국토이용계획·지역발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br>•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국가 중장기계획 미포함일 경우 선정 탈락 |
| 사업계획 구체성 | • 사업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의 구체화 여부<br>• 건축·토목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사업규모, 주요 사업내용 결정 여부<br>• R&D사업중 상향식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 분야와 내용의 구체화 여부 | 건물 규모, 기능, 부지 등 미확정일 경우 선정 탈락 |
| 사업추진 시급성 | • 국가 중장기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부처내 사업간 우선순위(우선순위 고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부처에서 제시한 순위를 우선적으로 반영)<br>• 해당사업의 차기 년도 정부예산안편성 필요성<br>• SOC 사업의 경우 교통수요 및 혼잡도 시급성 고려<br>• R&D사업 경우 기술개발의 시급성 고려 등 | 부처내 최하위 우선수준의 경우 선정탈락 |
| 국고지원 요건 | • 국고지원 대상여부<br>• 재원분담 형식 및 매칭 비율<br>• 재원지원의 적합성 여부 | 기존사업과 차별성 미흡할 경우 선정탈락 |
| 지역균형 발전 정도 | • 지역균형발전 계획 반영 여부<br>•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 방지 및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당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br>• 재정자립도 수준<br>• 지역 낙후도 개선효과 등 | |
| 기술개발 필요성 | • 관련기술 분야의 국내외 연구 동향<br>• 기술개발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 R&D사업 자원확보방안 미비 선정 탈락 |

- 자료: 기획재정부(2012),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 2)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시기

○ 최종 대상사업 선정 시기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선정을 하게 된다.

- 상반기의 경우 전년 12월 신청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며, 하반기의 경우 당해

8월말 신청 접수된 사업에 한해서 최종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 예를 들어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신청시기와 대상사업 선정 시기를 나타내면 다음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다.
- 만약 2014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면 이후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종합분석 결과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2016년에 예산이 반영하게 된다.

○ KDI와 KISTEP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접수부터 조사결과 통보 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된다.

<표 9>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시기

| 구분 | 시기 |
|---|---|
| 상반기 대상사업 선정 | 전년 12월 신청접수 (예 : 2013.12) |
| 하반기 대상사업 선정 | 당해 연도 8월말 신정접수 (예 : 2014.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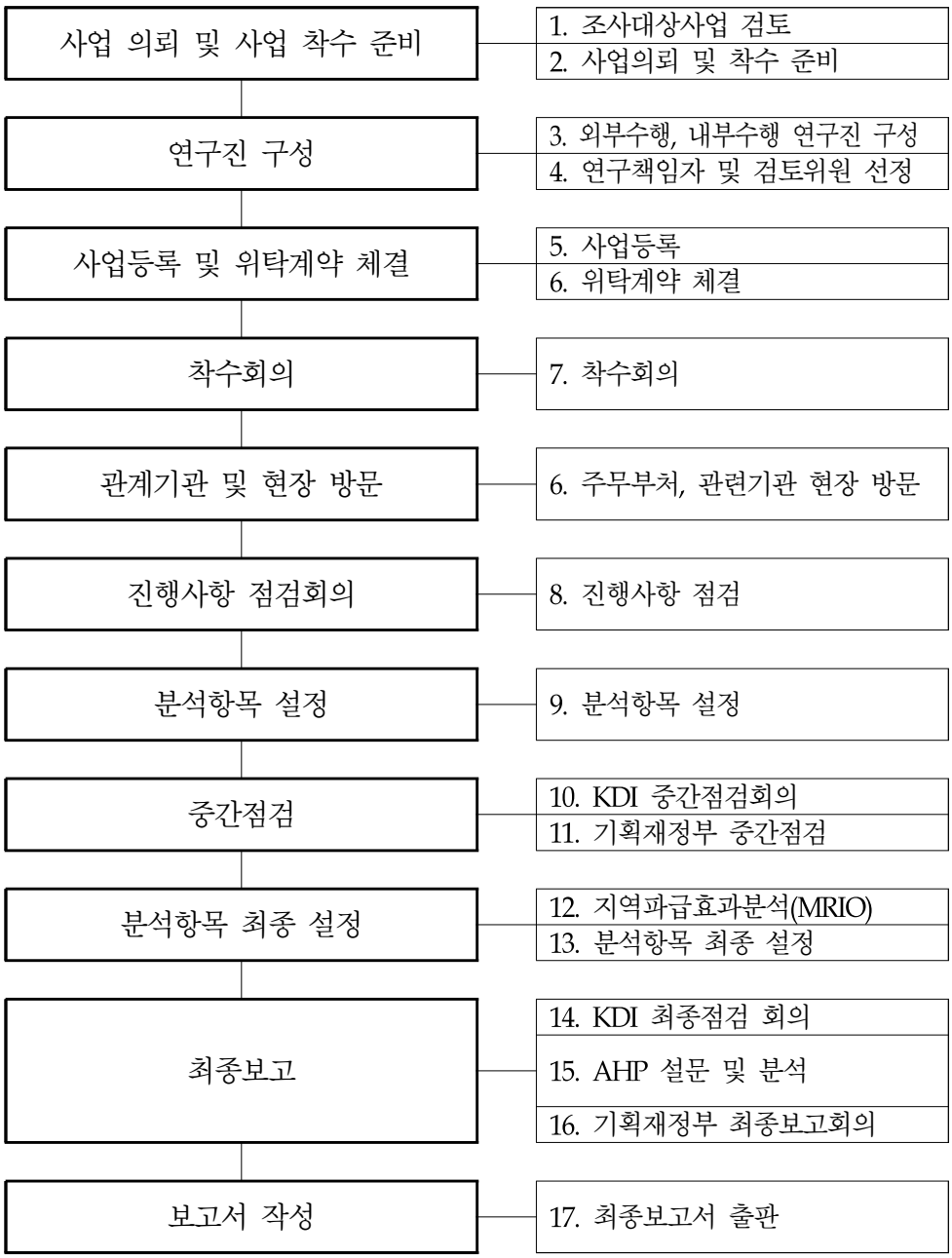
# 5.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절차

○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은 사업대상이 건설사업(SOC 사업 포함), 기타재정사업일 경우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괄하여 조사하고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 1) 건설사업 및 기타재정사업

○ 건설사업 및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조사 의뢰부터 최종 통보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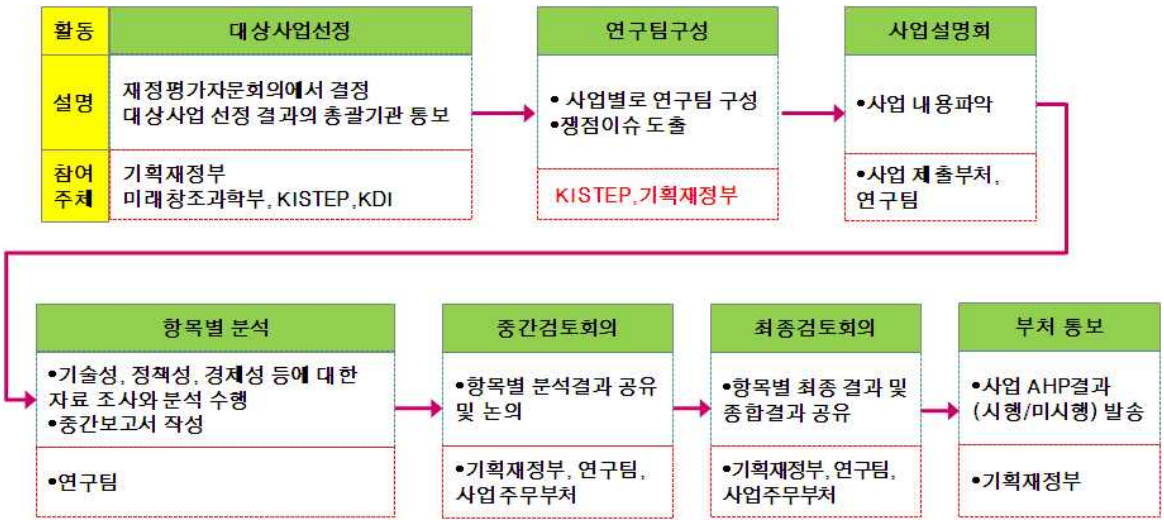

(그림 5) 건설사업 및 기타재정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절차

○ KDI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절차 중 중요한 사항은 지자체 및 추진기관은 기획재정부 착수, 중간, 최종점검 회의 업무에 참석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사업계획 내용과 분석결과에 대해 논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이다.

### 2) 국가연구개발(R&D)사업

○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과정은 다음 (그림 6)에 정리된 바와 같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경우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에 우선 선정되어야 하며, 기술성평가 항목이 대상사업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자료: 이윤빈(2013), 국책사업 타당성 평가 표준지침 및 주요쟁점, 『국비공모사업 발굴 및 유치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2013.12.) 자료집』

(그림 6)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절차

○「과학기술기본법」제 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① 법적근거의 존재, ② 연구개발과제의 특정, ③ 연구비의 출연 또는 공곡기금의 지원, ④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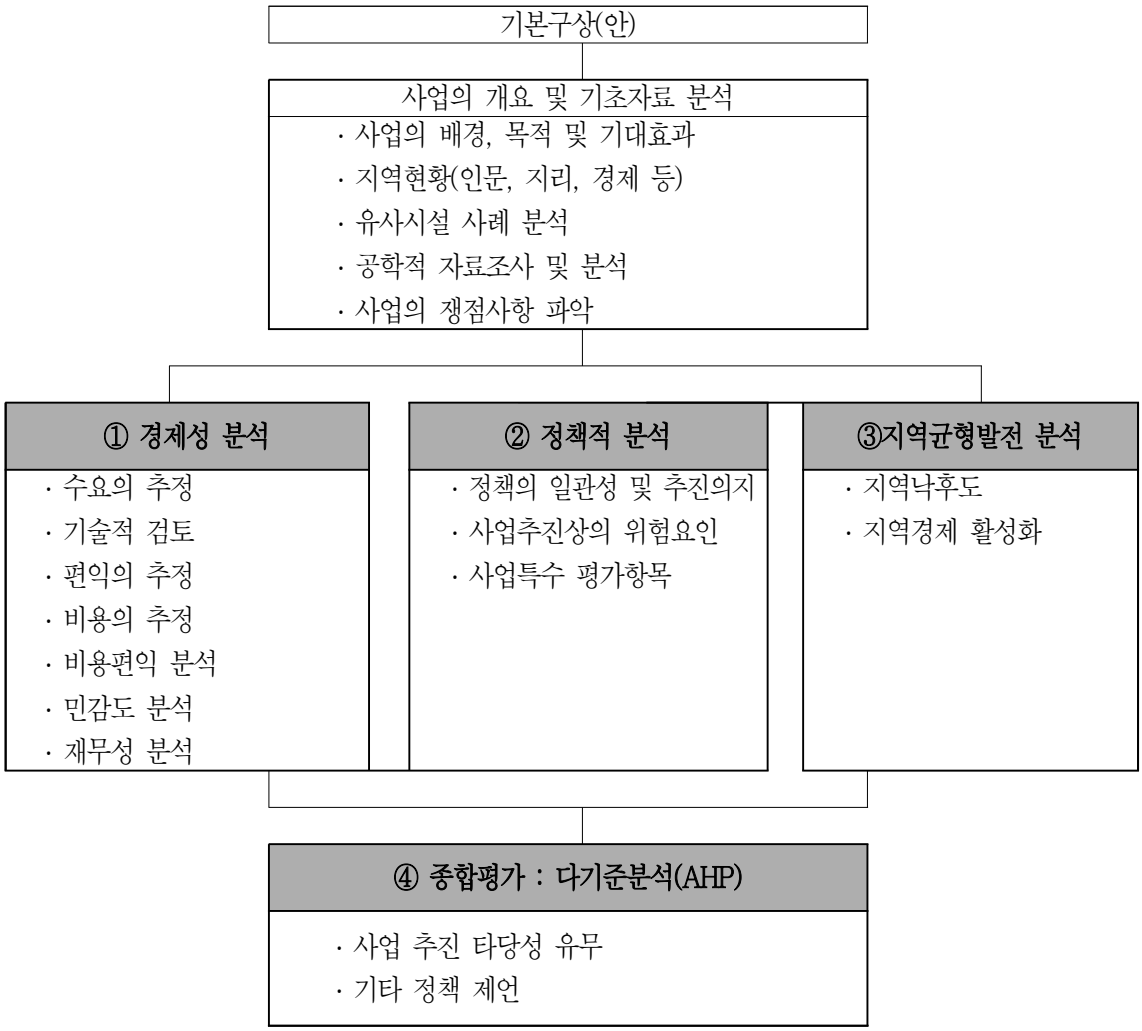
개발사업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결정하고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투자방향을 설정한다.

# 6.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 1) 건설 및 기타재정사업의 경우

○ 건설사업 및 기타재정사업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인 수행체계는 다음 (그림 7)에 정리된 바와 같다.




(그림 7) 건설 및 기타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적인 수행체계[3)]

## (1)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 및 경제적 가치화로 환산하고 그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이다.
- 이외 NPV, IRR 분석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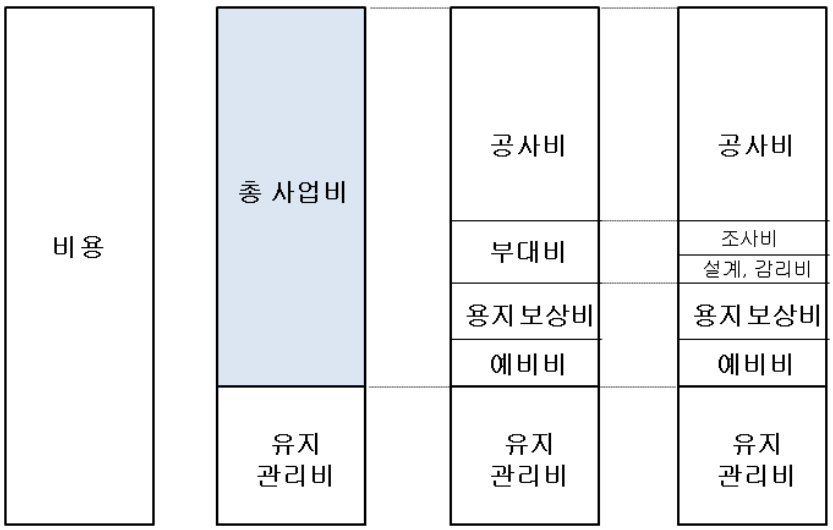
3)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 일반적으로 Benefit/Cost 비율이 1보타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도로·철도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비용과 편익으로 구분하고 가치화와 계량화가 가능한지 판단해야한다.
- 도로와 철도사업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침[4]을 마련하여 비용과 편익의 구성 내용을 권장하고 있다.
- 이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도로·철도부분 사업의 비용 항목 구성도는 다음 (그림 8), (그림 9)과 같다.

① 도로·철도사업 비용 항목

○ 도로사업의 비용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총사업비를 세분화 하면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 및 예비비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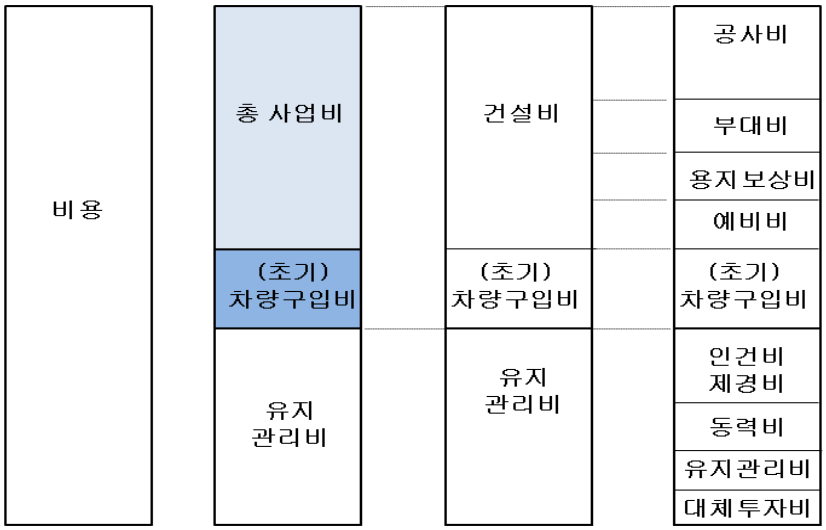



(그림 8) 도로 사업의 비용 항목 구성도

4)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 철도사업의 비용 구성은 총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되며, 총사업비는 건설비와 차량구입비로 나눠진다.

- 건설비에는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로 구성되고, 운영비는 인건비, 동력비, 유지관리비 대체투자비로 구성된다.
- 철도사업의 경우 초기 차량구입비가 포함되는 특징이 있다.




(그림 9) 철도 사업의 비용 항목 구성도

② 도로·철도사업 편익 항목

○ 도로와 철도부문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 항목은 직접편익항목과 간접항목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 포함되는 사업효과는 다음 <표 10>, <표 11>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0> 도로 사업 편익 항목

| 구분 | 세부항목 |
|---|---|
| 직접편익 | • 차량운행비용 절감<br>• 통행시간 절감<br>• 교통사고 감소<br>• 쾌적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정상 향상 등 |
| 간접편익 | •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절감<br>• 지역개발효과<br>• 시장권 확대<br>• 지역산업구조 개편 |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표 11> 철도 사업 편익 항목

| 구분 | | 세무항목 |
|---|---|---|
| 직접편익 | 철도이용자 편익 | • 철도(기존 및 신규철도) 사용자 및 화물의 통행시간 절감<br>• 쾌적성, 정시성, 안정성 향상 등 |
| | 타 수단 이용자 편익 | • 차량운행비용 절감<br>• 도로·철도 간 전환수요에 의한 통행시간 절감편익 |
| 간접편익 | | •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절감<br>• 지역개발효과<br>• 시장권 확대<br>• 지역산업구조 개편<br>• 고소도로 유지관리 절감<br>• 주차수요 감소로 인한 주차공간 기회비용 절감<br>• 공사 중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br>• 철도부문 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 (2) 정책적 분석

○ 정책적 분석은 사업추진의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사업 준비정도, 재원조달가능성, 환경성 평가 등이 중요한 평가항목들이며, 이러한 항목들이 평가과정에서 미흡하지 않고 충족될 때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평가 항목들은 계량화가 가능한 정략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지 등의 정석인 내용이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

- 또한 문화유적지나 갯벌·습지 등 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환경적 가치의 평가항목이 반영되어야 한다.
- 추가평가 항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한다.
- 예를 들어 재난대비 기여도, 교통 혼잡 해소와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

<표 12> 정책적 분석 항목 및 세부 평가 항목

| 구분 | | 세부 평가 항목 |
|---|---|---|
| 정책적 분석 | 정책의 일관성 추진의지 | • 사업추진의지<br>• 상위계획과의 연계성<br>• 사업의 준비정도<br>• 추가평가항목(선택) |
| | 사업추진의 위험요인 | • 재원조달가능성<br>• 환경성평가<br>• 추가평가항목(선택) |
| | 사업 특수평가 | • 추가평가항목(선택) |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 (3)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16개 광역시도, 168개 기초단체의 지역낙후도 순위를 적용한 지역낙후도 개선,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이 분석내용에 포함된다.
-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은 해당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가산점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 이런 분석내용을 포함하는 이유는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낙후도 분석내용도 낙후한 지역에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정방법은 다음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3> 지역균형발전 분석 세부 평가 항목

| 구분 | 세부 평가 항목 | 산정 방법 |
|---|---|---|
| 지형균형 발전분석 | 지역 낙후도5) | $UI^r = \sum_i Z_i^r \cdot W_i$<br>$UI^i$ = $r$지역의 지역나후도지수<br>$Z^i$ = $r$지역의 표준화된 지표 $i$의 값<br>$W^i$ = 지표 $i$의 가중치 |
| | 지역경제 파급효과 | 다지역투입산출모형(MRIO) |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 다지역투입산출(multi-regional input-output, MRIO) 모형은 경제 내에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과정에 발생한 거래를 지역간, 산업간 거래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이며, 사업추진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1960년대부터 국가단위 산업연관표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0년 실측표까지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국가 단위 산업연관표는 지역간 산업연관 관계가 분석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특성을 반영한 지역간투입산출표(MRIO)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한국은행에서 2005년기준 지역산업연관표가 작성되어 지역경제파급효과에 활용되고 있다.
- 2005년 이후 지역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작성되고 있지 않으며, 각 지자체에서 필요해 의해 간접적인 추정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 (4) 종합평가(다기준분석)

○ 1999년 예비타당성 제도도입 이후 2002년까지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분석(B/C)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였으나 경제성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치성, 지역균형발전등의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2003년부터 계층화분

5) 지역낙후도 산정방법은 한국개발연구원(2008),「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에서 참고하길 바란다.

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도입 시행하였다.

- 정량화가 가능한 항목들에 있어서 상이한 척도 평가, 정성적 항목들의 평가 등 평가 기준이 다양하여 종합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 다기준방법론을 적용하며, 그중 하나가 계층화화분석법(AHP)이다.

○ AHP 분석은 평가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AHP 분석결과 종합점수가 0.5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 건설사업의 평가 항목 및 평가내용과 가중치 범위는 각각 다음 <표 14>와 <표 15>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4> 건설사업의 경우 AHP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 평가 내용 | 비고 |
|---|---|---|---|
| 경제성분석 | | • B/C 비율, NPV, IRR | •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 높음 |
|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 •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 •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시행점수 높음 |
| | 지역경제파급 효과 |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 비율 | • 파급효과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 높음 |
| 정책적 분석 | 정책의 일관성 | • 상위계획 반영여부 정성적 판단 | • 반영이 구체적일수록, 일치성이 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 높음 |
| | | • 중앙정부, 해당 지자체 추진의지 정성적 판단 | • 사업추진의지가 클수록 사업시행점수 높음 |
| | | • 사업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정성적 판단 | • 사업 준비가 높다고 판단될수록 사업시행점수 높음 |
| | 사업의 추진상의 위험요인 | • 재원조달 가능성<br>• 정성적 판단 | •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 1 |
| | |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성적 판단 | •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우<br>• AHP 평점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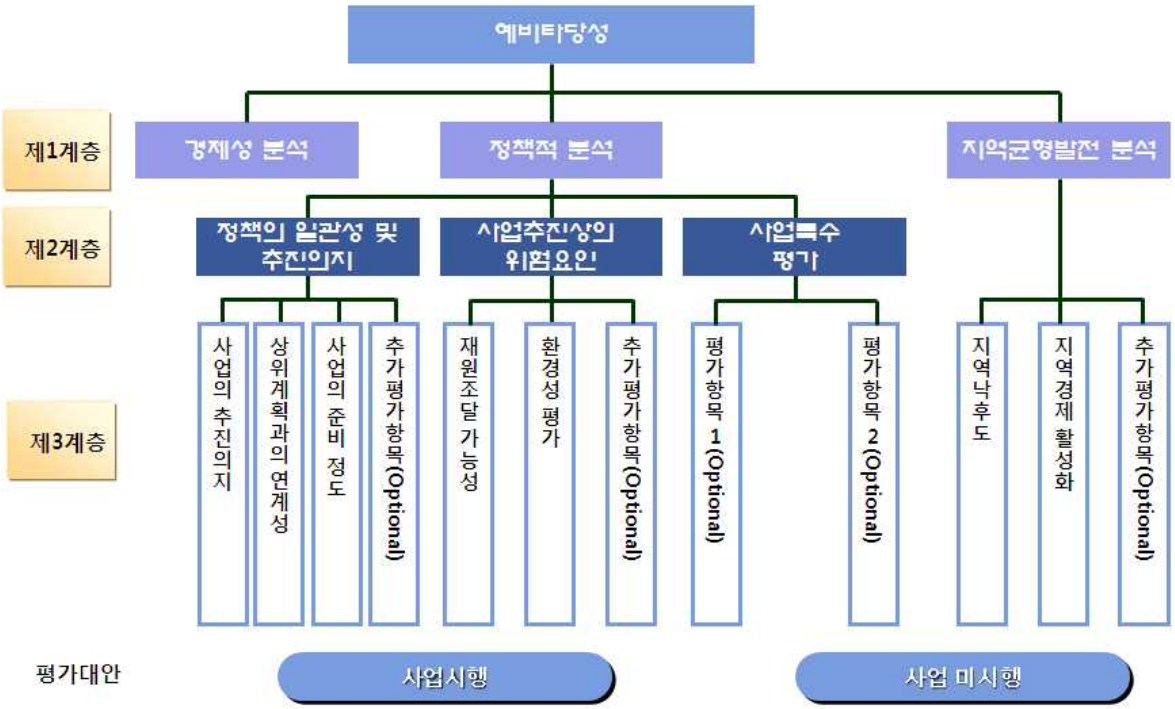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8),「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표 15> 건설사업의 AHP 수행시 항목별 가중치

| 사업유형 | 경제성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분석 |
|---|---|---|---|
| 건설사업, SOC사업 | (40~50%) | (25~35%) | (20~30%) |

- 자료 : 기획재정부(2012),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 건설사업의 AHP 분석 기본 구조는 다음 (그림 10)과 같다.




-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2008),「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에서 인용

(그림 10) 건설 및 기타재정사업 AHP 기본 구조

○ 대형 국책사업이 기타재정사업인 경우 분석항목에 대한 가중치 범위는 다음<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6> 기타재정사업의 AHP 수행시 항목별 가중치

| 사업유형 | 경제성분석 | 정책적 분석 |
|---|---|---|
| 기타재정사업 | (25~50%) | (50~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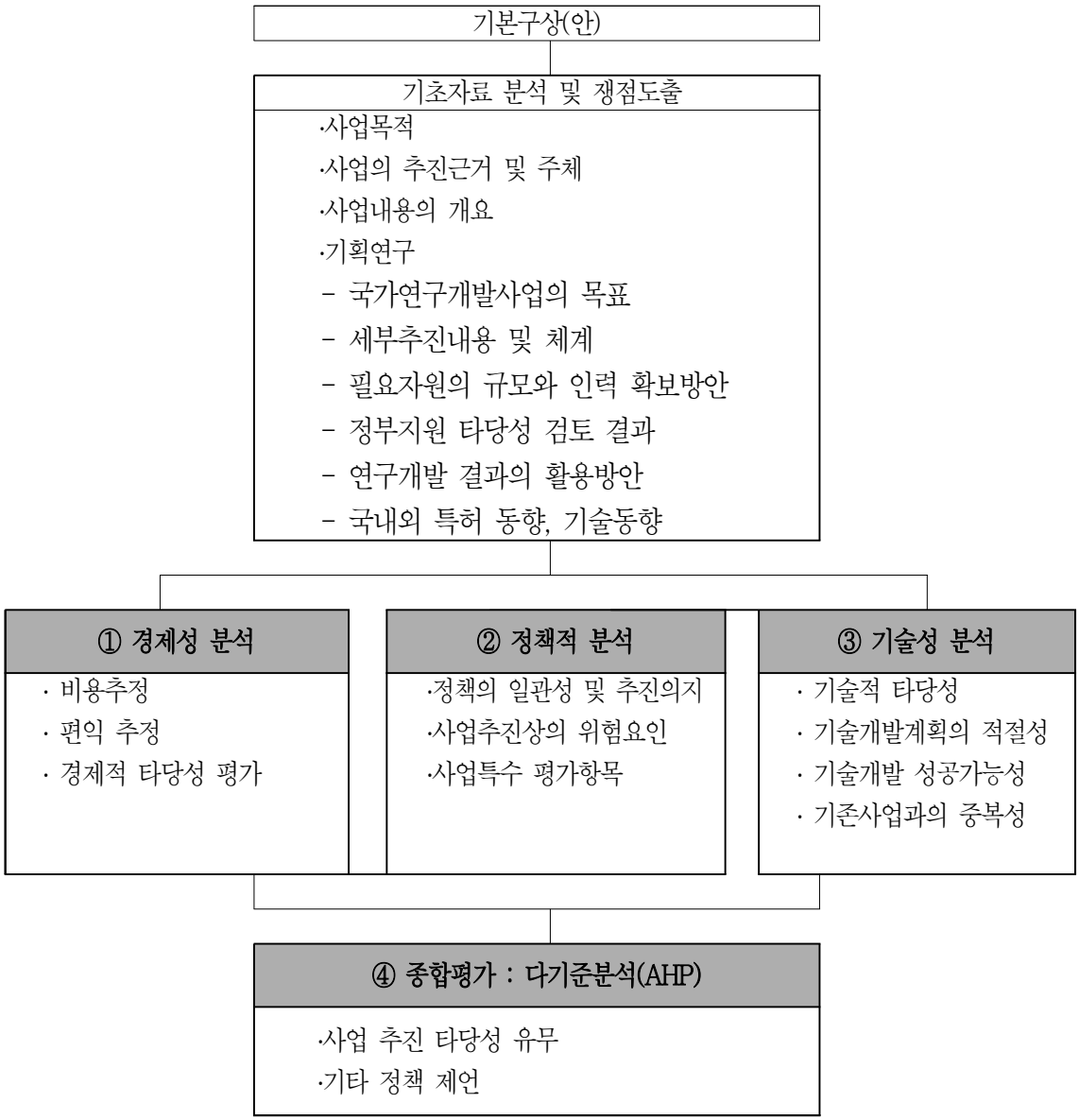
- 자료 : 기획재정부(2012),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 2) 국가연구개발(R&D)[6] 및 정보화사업의 경우

○ 국가연구개발 및 정보화사업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인 수행체계는 다음 (그림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의 체계를 보면 기술성분석, 경제성분석, 정책적 분석 항목으로 구성된다.
- 이 때 건설업과 다른 점은 기술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수행된다는 점이다.

6)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그림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적인 수행체계

○ 연구개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사항을 정리 하면 다음 <표 16>와 같다.

<표 16>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주요쟁점 사항

| 번호 | 주요쟁점사항 | 기술적 타당성 | | | 정책적 타당성 | | 경제적 타당성 |
|---|---|---|---|---|---|---|---|
| | | 계획의 적절성 | 성공가능성 | 중복성 | 일관성 및 추진의지 | 위험요인 | |
| 1 | 사업을 통한 해결할 문제 제시여부 | ○ | | | | | |
| 2 |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수단 제시 여부 | ○ | | | | | ○ |
| 3 | 제안된 사업의 추진 지연될 경우 발생할 문제 심각성 정도 | ○ | ○ | | | | |
| 4 |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구체화, 참여의사 정도 | ○ | | ○ | | | |
| 5 | 기술개발 산출물의 종류 및 산출시점, 사업통제 가능성 | ○ | | | | | |
| 6 | 사업 제안 과정 | ○ | | | ○ | | |
| 7 | 제안된 사업과 R&D활동 사업목표 지원 여부 | ○ | | | | | |
| | 사업 위험정도 허용 가능 수준 여부 | ○ | ○ | | | ○ | |
| 8 | 제안된 기술요소 유효성 여부 | ○ | | | | | |
| 9 | 사업규모, 비용 추정 적절성,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비, 기존유사투자규모 | ○ | | ○ | | | ○ |
| 10 | 사업으로 인한 직접효과 증가분 | ○ | | | | | ○ |
| 11 | 제안된 사업 기대성과 | ○ | | | | | |
| 11 | 기대성과 이유와 확실성 여부 | ○ | | | | | |
| 12 | 성과평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여부 | ○ | | | | | |
| 13 | 중앙정부 지원 논거 | ○ | | | ○ | | |

- 자료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1판)」

## (1) 경제성 분석

① 비용 항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 항목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의하는 총사업비 범위를 따르며, 연구기반구축 연구개발사업과 순수 R&D사업으로 구분된다.

- 연구기반구축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비용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

구입비, 운영비(인건비, 연구비, 장비비, 유지보수비, 경상운영비)가 해당된다.

- 순수 R&D 사업의 비용 항목으로는 직접연구비, 인건비, 장비비, 간접비 등이다.
- 참고로 연구개발사업 분야 별 비용 항목은 다음 <표 17>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7> 연구개발사업의 비용 항목

| 구분 | 비용 항목 |
|---|---|
| 연구기반구축 연구개발사업 | • 공사비<br>• 보상비<br>• 시설부대경비<br>• 장비구축·구입비<br>• 운영비(인건비, 연구비, 장비비, 유지보수비, 경상운영비) |
| 순수 R&D 사업 | • 직접연구비(위탁연구비 포함)<br>• 인건비<br>• 장비비<br>• 간접비 |

- 자료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 비용추정 절차는 분석목적의 규정, 분석계획의 수립, 사업특성의 규정, 분석방법 결정, 기초자료 인식 및 가정 수립, 자료 수집, 비용추정, 민감도분석, 불확실성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추정하게 된다.

- 다음은 비용추정 관련 규정과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관련규정에 따라 비용이 추정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표 18>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용추정 관련 규정

| 구분 | 관련 규정 | 비고 |
|---|---|---|
| 연구기반구축 R&D | •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 준 제 15조<br>• 교육과학기술부,「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공사 유형 |
| | •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 준 제 7조<br>• (교육과학기술부),「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br>• (방위사업청),「원가계한관리지침」 | 제조 |
| | •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 준 제 30조<br>• (교육과학기술부),「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br>•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br>• (미래창조과학부),「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br>• (기획재정부),「예산안작성 세부지침」 | 기타용역 |
| 순수 R&D | •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 준 제 23조<br>• (교육과학기술부),「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학술용역 |

- 자료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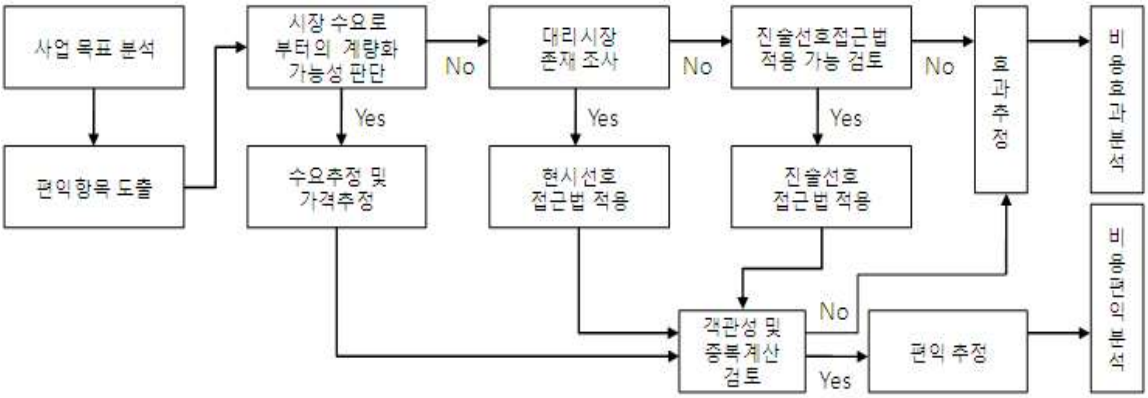
○ 연구개발사업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물량의 적정규모와 적정 단위가격을 확정해야 한다.

- 적정 단위가격의 확정은 감정가격, 유사 사례 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유사사례 가격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중 국가 R&D사업관리서비스를 참고하면 된다.

② 편익 항목

○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비용항목 뿐만 아니라 편익항목도 추정되어야 한다.

- 편익항목은 시장에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여 시장수요 계량화 가능하다면 시장수요를 추정하고 시장수요 계량화가 어렵다면 대리시장을 설정하여 조사한다.
- 다음 (그림 18)은 편익항목으로부터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의 개략도이다.




- 출처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에서 인용

(그림 12)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 개략도

○ 연구개발 사업의 편익항목에 반영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국가연구개발사업 편익항목 분류

| 구분 | 편익 |
|---|---|
| 기술개발에 의한 편익 | • 기술과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부가가치 또는 비용절감분 |
| 시설구축에 의한 편익 | •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br>• 건물/시설/연구소에 투입된 연구개발투자로 인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발생하는 이용자 편익 |
| 장비구축에 의한 편익 | • 장비 및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운영자 운영수입<br>• 이용자 비용 절감분<br>• 기초연구 체질개선과 관련된 과학기술적 편익<br>* 신규수요와 이전수요를 조사하여 신규수요에 대한 부가가치만 반영 |

- 자료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중 경제성 분석에서 반영될 수 있는 편익과 미반영 되는 편익 항목은 다음<표 20>와 같다.

<표 20> 예비타당성 조사시 편익 반영 및 미반영 항목

| 구분 | 예비타당성 조사<br>비용편익분석시 편익 반영 | 예비타당성 조사<br>비용편익분석시 편익 미반영 |
|---|---|---|
| 정(+)의 가치 증가 | • 부가가치 증대<br>- 신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량 증가<br>• 기술거래<br>- 기술이전에 의한 로열티 수입 | •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도 향상<br>• 과학기술자의 교육훈련<br>• 국가위상 제고<br>• 지역개발효과<br>• 시장권의 확대<br>• 지역산업구조 개편<br>• 부가가치효과<br>• 고용유발효과<br>• 수출유발효과<br>• 소득분배효과<br>• 취업유발효과 |
| 부(-)의 가치 증가 | • 비용 절감<br>- 생산투입 자원 및 시간의 절감<br>- 연구기간, 출장회수 등의 연구수행<br>- 비용 절감<br>- 물류비용절감<br>• 피해 비용 감소<br>-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br>• 질병비용 감소<br>• 환경비용 감소 | |

- 자료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 (2) 정책성 분석

○ 정책성 분석 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상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 정책의 일관성 분석은 국가계획의 최상위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의 계획서에 제시된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일치성을 평가한다.
-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는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연구자 등에 대한 정성평가 항목이다.

<표 21> 정책성 분석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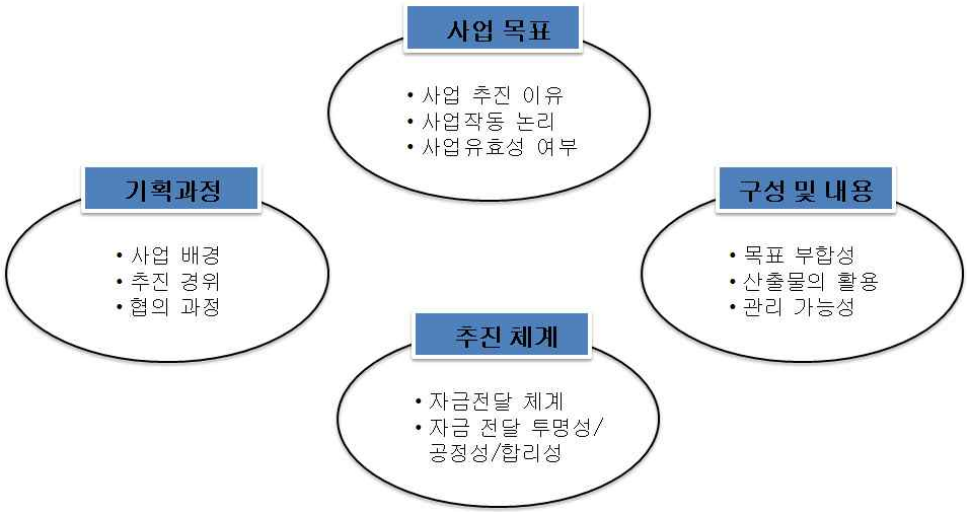
| 구분 | 세부항목 |
|---|---|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br>•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br>• 사업 준비 정도 |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 재원조달 가능성<br>• 환경성<br>• 추가 평가항목(선택적) |
| 사업특수 평가항목 | • 추가항목(선택적) |

- 자료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 (3) 기술성 분석

○ 기술성 분석의 기본 평가항목은 기술개발계획이 적절성, 성공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평가는 사업추진이유(why), 사업이 작동 논리(how), 수행주체 및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who, where), 구성 및 내용(what, when) 관점에서 검토된다.




(그림 13) 기술개발계획 적절성 평가요소

○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은 크게 기술추세 분석과 기술수준분석으로 이루어지며 각

분석내용과 분석방법 등을 요약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내용과 세부 항목

| 구분 | 분석내용 | 분석방법 | 결과 해석 | |
|---|---|---|---|---|
| 기술추세 분석 | 기술특화 현황분석 | RTA 지수 (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 결과 | 의미 |
| | | $RTA = \dfrac{P_{ij} / \sum_{i}^{m} P_{ij}}{\sum_{j}^{n} P_{ij} / \sum_{i}^{m}\sum_{j}^{n} P_{ij}}$ | RTA > 1 | 특화정도 높음 |
| | | | RTA = 1 | 특화정도 평균 |
| | | $P_{ij}$: $i$분야에 대한 $j$의 연구문헌(논문, 특허)수 | RTA < 1 | 특화정도 낮음 |
| 기술수준 분석 | 기술분야 영향력 정도측정 | A.A.I(Attractivity Index) 매력도지수 | 결과 | 의미 |
| | | | A.A.I > 1 | 영향력 높음 |
| | | $A.A.I = \dfrac{\text{특정분야, 특정국가의 평균 피인용}}{\text{특정분야, 전체국가의 평균 피인용}}$ | A.A.I = 1 | 영향력 평균 |
| | | | A.A.I < 1 | 영향력 낮음 |
| | 기술혁신활동 영향정도측정 | CPP(Cites Per Publications)지수 | 단순 평균피인용수 | |
| | | $CPP = \dfrac{\sum_{i=1}^{t} C_i}{t}$ <br> $t$: 전체분석기간(년) <br> $C_i$: $i$년도의 피인용수 | | |
| | 기술혁신 질절수준 정도 측정 | PII(Publication Impact Index) 출판영향지수 | 결과 | 의미 |
| | | $PII_a = \dfrac{CPP_a}{CPP_t} = \dfrac{C_a / N_a}{C_t / N_t}$ <br> $C_a$: $a$의 연구출판물 피인용수 <br> $N_a$: $a$의 연구출판물수 <br> $C_t$: 전체 연구출판물의 피인용수 <br> $N_t$: 전체 연구출판물수 | PII > 1 | 질적수준 우위 |
| | | | PII = 1 | 평균 |
| | | | PII < 1 | 질적수준 열위 |
| | 최근기술동향 | CII(Current Impact Index) 현재영향지수 | | |
| | | $CII = \dfrac{\sum_{i=1}^{5} \left( \dfrac{c_t / n_t}{C_t / N_t} \times n_t \right)}{\sum_{t=1}^{5} n_t}$ | | |
| | | $t$: 현재 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5개년 기간 <br> $c_t$: $t$연도 특정연구출판물이 현재연도 인용된 전체수 <br> $n_t$: $t$연도 특정연구출판건수 <br> $C_t$: $t$연도 전체연구출판물이 현재연도 인용된 전체수 <br> $N_t$: $t$연도 전체 연구출판물건수 | | |

(표 계속)

| 구분 | 분석내용 | 분석방법 | 결과해석 |
|---|---|---|---|
| 기술수준 분석 | 특정연도 기술력 측정 | TS(Tecnology Strength)기술력 종합지수<br>$TS^{CII} = CII_i \times N_i$<br>$CII_t$: 해당년도의 주체 $i$의 $CII$값<br>$N_i$: 해당 연도의 주제 $i$의 특허건수 | 기술력 종합 평가 |
| | 일정기간 누적된 기술력 측정 | $TS^{\Pi I} = \Pi I_i \times N_i$<br>$\Pi I_t$: 해당년도의 주체 $i$의 $\Pi I$값<br>$N_i$: 해당 연도의 주제 $i$의 특허건수 | |
| | 시장지배 정도측정 | CRn 집중률 지수<br>$CRn = \sum_{i=1}^{n} S_i = \sum_{i=1}^{n} \frac{N_i}{N}$<br>$S_i$: 주제 $i$의 시장 기술(논문, 특허)점유률<br>$N_i$: 주제 $i$의 시장 기술(논문, 특허)규모<br>$N$: 전체시장 기술(논문, 특허)규모 | 경쟁구조 분석<br>시장독과정 수준 평가<br>독과점 우려 수준<br>CR1 =0.5(50%)이상<br>CR2 = 0.75(75%) 이상 |
| | 시장지배 정도측정 | HHI(Herscman-Herfindal Index)<br>$HHI = \sum_{i=1}^{m} S_i^2 = \sum_{i=1}^{m} (\frac{N_i}{N})^2$<br>$S_i$: 주제 $i$의 시장/기술(논문, 특허) 점유율<br>$m$: 해당분야의 전체 주체수<br>$N_i$: 주제 $i$의 시장/기술(논문, 특허) 규모<br>$N$: 전체 시장/기술(논문, 특허)규모 | 경쟁구조 분석<br>독과점 우려 수준<br>HHI > 0.18 |
| | 연구개발 협력자 협력강도 측정 | SI(Salton's Index) 협력강도지수<br>$r = \frac{P_{ij}}{\sqrt{P_i P_j}}$<br>$P_{ij}$: $i$와 $j$의 공동연구(논문, 특허)<br>$P_i$: $i$의 연구(논문, 특허)<br>$P_j$: $j$의 연구(논문, 특허)수 | 조사대상 사업중 지역과 관련된 역량이 중용한 경우 유용한 지표 |
| | 기술적인 선도정도 측정 | SL(Science Linkage) 과학연계지수<br>$SL_t = \frac{\sum_{i=1}^{n} S_i}{n_t}$<br>$n_t$: $t$연도에 등록된 특허건수<br>$S_i$: $i$특허가 인용한 과학기술 논문수 | 예비타당성조사시 참고자료만 활용 |
| | 기술진 부화측정 | TCT(Technology Cycle Time)<br>인용된 특허 발행연도-인용한 특허 발행연도 차이값의 중간값 | TCT값 클때 기술진부화 더딤<br>TCT값 작을때 기술진부화 급속 |

- 자료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표 23> 연구시설·장비 구축분야 기술적 타당성 점검표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
| 사업 부합성 | • 구축 예정 장비 도입이 사업과 부합한가? |
| 성능의 적정성 및 활용성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성능인가? |
| | • 동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가? |
| 국가 전략적 필요성 | • 국가 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가? |
| 장비운영의 계획성 |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및 전문성을 확보하였는가? |
| | • 연구 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적절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
| | • 연구과제 종료 후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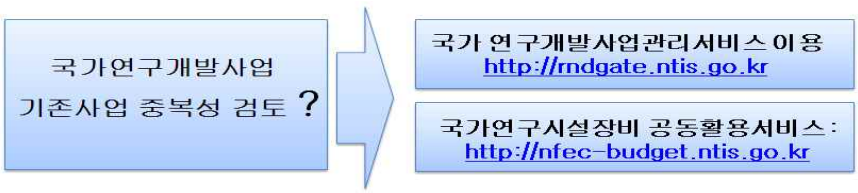
- 자료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분석은 유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기존에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로부터 추출할 수 있고, 국가 연구개발사업관리서비스에 수록된 조사·분석 통계를 활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 또는 키워드를 활용한 중복대상과제를 추출하는 방식과 유사과제검색을 이용하여 중복성 과제를 체크한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관리서비스: http://rndgate.ntis.go.kr

○ 한편 기존에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시점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구장비예산심의지원서비스에 등록된 것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여 중복시설 여부를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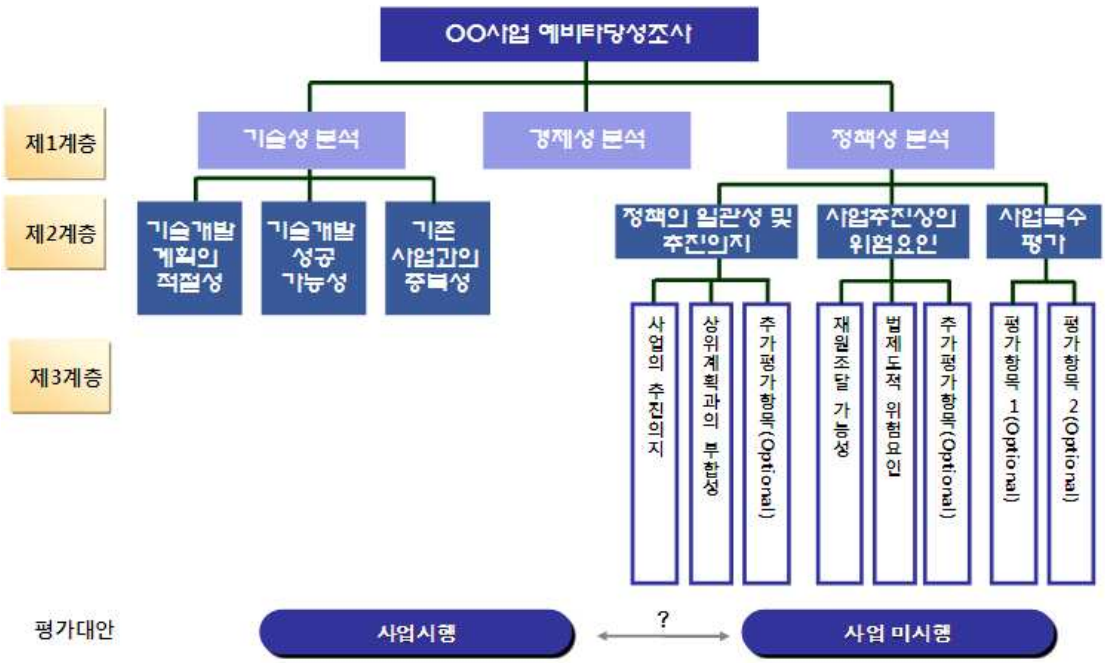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 ‘ttp://nfec-budget.ntis.go.kr




(그림 1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존사업 중복성 검토

### (4) 종합평가(다기준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기본 구조는 다음그림과 같다.




- 출처 :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에서 인용.

(그림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AHP 기본 구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AHP 수행시 가중치는 다음<표 24>와 같다.

- B/C는 비용편익분석, E/C는 비용효과분석을 의미한다.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AHP 수행시 항목별 가중치

| 사업유형 | | 경제성분석 | 정책적 분석 | 기술성 분석 |
|---|---|---|---|---|
| 연구개발사업 정보화사업 | B/C | (40~50%) | (20~30%) | (30~40%) |
| | E/C | (30~40%) | (20~30%) | (40~50%) |

- 자료 : 기획재정부(2012),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점 기준은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항목 (1계층) | 평가항목 (2계층) | 평가항목 (3계층) | 평가내용 | 비고 |
|---|---|---|---|---|
| 기술적 타당성분석 | 기술개발의 적절성 | - | • 기획과정의 적절성<br>• 사업목표의 적절성<br>•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br>• 추진체계 적절성 | 완성도가 높을수록 |
| | | | | 사업시행점수 ↑ |
| |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 | • 기술추제분석<br>• 기술수준분석 | 기술추세 분석과 기술수준 분석 결과 당위성 높을수록 |
| | | | | 사업시행점수 ↑ |
| | 기존사업과 중복성 | - | • 사업수준의 중복성 검토<br>• 과제수준의 중복성검토<br>• 지원규모의 적정여부 검토 | 중복성이 낮고 유사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을수록 |
| | | | | 사업시행점수 ↑ |
| 정책적 타당성분석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 법정계획과의 부합정도 | 정부계획과 부합성이 높을수록 |
| | | | | 사업시행점수 ↑ |
| | |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 • 기관 및 담당부처의 사업추진의지<br>• 유관기관의 협제체계 |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협조체계가 긴밀할수록 |
| | | | | 사업시행점수 ↑ |
|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재원조달가능성 | • 정부 및 민간 재원조달 가능성 | 재원조달가능성이 높을수록 |
| | | | | 사업시행점수 ↑ |
| | | 법제도적 위험요인 | • 법·제도적 제한여부 | 법·제도적 위험정도가 낮고 구체적 대응방안이 마련될 경우 |
| | | | | 사업시행점수 ↑ |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경제성 | | • 비용추정<br>• 편익추정<br>• 비용편익분석<br>• 비용효과분석 | B/C 비율이 높을수록 |
| | | | | 사업시행점수 ↑ |
| | | | | 비용 대비 효과의 값이 비교대상 사업에 비해 클수록 |
| | | | | 사업시행점수 ↑ |

- 자료: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 연구개발사업의 조사 과정에서 분석내용과 분석방법 등을 요약하면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연구개발사업 위한 주요 분석방법 및 유의사항

| 구분 | | 분석 방법 | 분석 내용 | 유의사항 |
|---|---|---|---|---|
| 전문가 평가 | | 선정된 전문가 질문, 설문 분석 | 사업투자/중지 검토 | 판단근거 기준 부족 여부 |
| 지표분석 | | 통계분석 | 진행되는 사업 점검 | 지표의 적절성 |
| 문헌분석 | 정량분석 | 특허 기록, 인용 문헌 등 자료 분석 | R&D투자와 성과의 연계파악 | 사업성격 상이한 분야 비교 부적절 |
| | 데이터마이닝 | 연구결과물 (보고서, 출판물 등) 자료 분석 | 아이디어, 개념, 기술 공헌도 파악 | 광범위한 자료확보여부 |
| | 핵심특허분석 | 최신 인용 특허 자료 분석 | 해당 R&D 위치 확인 | 특허 정확성, 완전성 여부 |
| 네트워크 분석 | | 인터뷰, 설문, 자료 분석 | 연계 직접성, 상호영향 등 측정 | 사업의 가치 정량화 곤란 |
| 사례연구 | | 인터뷰, 직접관찰, 문헌조사 | 경향, 패턴 등 검토 | 충분한 대표성 확보 여부 일반화 가능 여부 |
| 설문조사 | | 횟수, 비율, 평균, 편차 등 기술통계 분석 | 아이디어, 의견, 선호, 관심, 경험 파악 | 적절한 모집단 반영여부 신뢰도 여부 |
| 벤치마킹 | | 유사사례 비교분석 | 모범사례 발굴 확인 | 비교 판단 기준 근거 제한된 양적지표 사용 여부 |
| 기술상용화추적 | | 기술추적분석 | R&D 사업 상용화 수준 확인 사업이 누적순이익 예측 | 인적자원이동· 기업합병 여부 |
| 비용-편익분석(B/C) | | 수리적 분석 | 경제성 파악 R&D 사업투자 결정 | 사업효과 항목 누락 여부 중복계산여부 |
| 계량분석 | | 이론모형 수리적 분석 | 가설 검증 원인효과 파악 생산성 증가 효과 파악 | 누락된 중요 효과존재여부 충실한데이타 확보여부 |
| 역사적추적 | | 연대기적 추적 조사 | 연구개발의 혁신 발달 절차 이해 증진 | - |
| 파급효과분석 | | | 사회적 영향 분석 | - |

- 자료: KISTEP(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 Ⅳ. 타시도의 국책사업 대응사례 검토를 통한 충남의 문제점과 과제 도출

## 1. 타시도 국책사업 대응체계 사례 검토

○ 충청남도의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3년 9월 최초로 충남연구원 차원에서 관련문제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 2014. 2. 5. (수)의 제 4차 워크숍까지 총 4회에 걸쳐, 국책사업의 진행절차와 지원과정에 대해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전북, 부산 등 모범 사례지역의 담당자 초청 발표가 이루어졌다.
- 이 외에도 서울과 경기, 충북과 경북, 울산 등의 담당자들에 대한 방문 및 전화 조사작업이 병행되었다.

<표 27> 충남의 국책사업 유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진행과정 요약

| 구분 | 발표 | 내용 |
|---|---|---|
| 제1차 워크숍<br>(2013. 10. 1.) | 충남연구원 | 충남 공공투자 유치지원센터(안) |
| 제2차 워크숍<br>(2013. 10. 30.)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br>(KISTEP) | 국책사업 타당성 평가 표준지침 및<br>주요쟁점(R&D사업 중심) |
| | 전북발전연구원 | 전북 국책사업 발굴 및 추진과정 |
| 제3차 워크숍<br>(2013. 11. 28.) | 한국개발연구원<br>(KDI)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이해<br>(非 R&D사업 중심) |
| | 부산발전연구원 | 부산지역 국책사업 성공사례 |
| 제4차 워크숍<br>(2014. 2. 5.) | 충남연구원 | 국책사업 대응을 위한 충남 공공투자<br>유치지원 및 관리센터 설치(안) |

○ 워크숍,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들에서는 공공투자 관련 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국책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각 센터들에서는 국책사업 외에 자체 재정사업에 대한 심사 및 관리를 병행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서울시의 경우 자체투융자 사업의 심사 및 관리 전담하고 있다.

### 1)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

○ 서울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인력은 총 11명 내외이며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 주요 사업은 타당성 분석 및 보고서 작성, 투융자심사대상 경제성 검토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6) 서울특별시 공공투자관리센터조직도

### 2) 충청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

○ 센터의 1년 예산은 대략 3억5천원만원 정도이며, 인력은 총5명 내외이다.

○ 센터의 주요사업은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지원이며 한해 평균 3~4건 정도 수행한다. (이 외 관내 투융자사업은 센터에서 심사를 지원)
- 국책사업은 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수요추정, 편익 및 비용 추정 등)하고 이에 대한 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17) 충북 공공투자분석센터

### 3) 전라북도「국책사업발굴단」설치운영[7)]

#### (1) 국책사업 발굴단 배경 및 목적

○ 전북발전연구원은 지자체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국책사업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북발전연구원 정책고문단과 국내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분과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 전북발전연구원의 국책사업발굴단은 SOC사업, 새만금, 농촌 및 농업관련 산업, 미래신산업 및 기계, 자동차, 조선 등 기계부품산업 등의 전략산업, 문화관광 및 체육관련 사업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업무를 수행한다.
- 발굴된 일부 사업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활용한다.

○ 사업발굴 대상은 전라북도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총 사업비 500억(국비 300억 이상) 이상이 투입되는 예타 대상사업과 전라북도 4대 특화비전(농생명수도, 한문화 창조거점, 중추도시권, 연기금특화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전북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제도개선 및 시책 등이다.

7) 전라북도(내부자료), 2014년 국책사업발굴단 포럼 운영계획.

## (2) 국책사업 발굴단 운영

○ 국책사업발굴단 운영개요는 다음 <표 28>에 제시된 바와 같다.

- 도(실·국) 주관으로, 사업발굴 단계부터 해당 실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발굴 및 사업화 실적을 직무성과(BSC) 평가연계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표 28>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 운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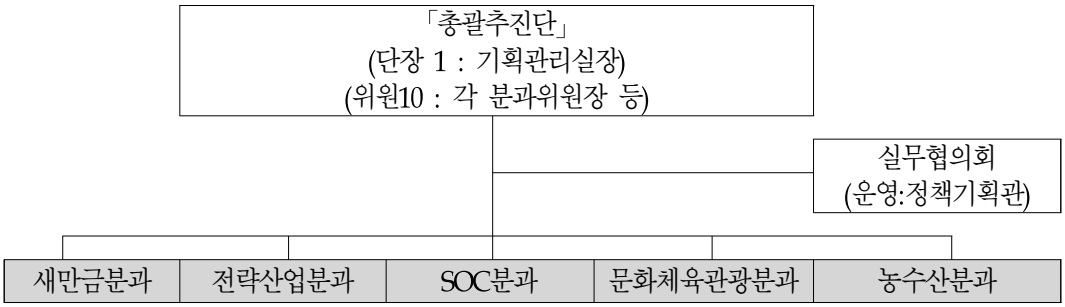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포럼명 | 국책사업발굴 포럼 |
| 기간 | (예시) '14. 2 ~ '14. 12 (11개월) |
| 분과포럼 | 8개 분과<br>(지역개발, SOC, 산업경제 농·식품,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새만금) |

-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3)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

○ 국책사업발굴단의 추진체계는 다음(그림 18)과 같다.

- 1총괄추진단, 1실무협의회, 5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그림 18) 전북 국책사업 발굴단 추진 체계

○ 국책사업발굴단의 총괄추진단 구성 및 역할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 총괄추진단 구성 및 역할

| 구분 | 내용 |
|---|---|
| 구성 | • 단　　장 : 기획관리실장 1명<br>• 위　　원 : 총 10명(5개분과위별 공동위원장 2명씩) |
| 운영주체 |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
| 주요역할 | • 국책사업발굴단 운영 총괄·조정<br>• 분과위 추진체계 구축 및 추진상황 점검<br>• 분과위별 발굴사업 검토 및 최종발굴사업 선정<br>• 최종사업에 대한 보고회(중간/최종) 개최 |

-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국책사업발구단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은 다음<표 30>와 같다.

<표 30>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 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

| 구분 | 내용 |
|---|---|
| 구성 | • 협의회장 : 정책기획관<br>• 위　　원 : 5개분과위 소속 PM(전발연), 간사(도) 1명씩, 총 10명) |
| 운영주체 |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
| 주요역할 | • 5개 분과위 운영 실무 협의(위원구성, 추진방안, 예산 집행 등)<br>• 회의 개최 및 추진시기 등 일정 협의·조정 |

-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국책사업발굴단의 분과위원회 구성은 5개 분과로 구성·운영하며 주요역할은 다음 <표 31>에 정리된 바와 같다.

- 5개 분과 위원구성은 전라북도(실국)에서 기 운영중인 협의회, 위원회, 추진단 등을 최대한 활용하며 미 운영중인 분과는 해당 실국과 분과 PM 등이 협의하여 전국적 전문가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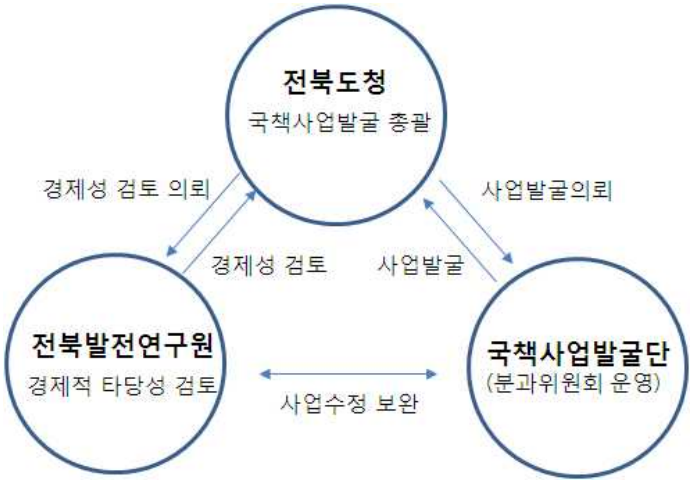
<표 31>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분 | 내용 |
|---|---|
| 구성 | • 위원장 : 2인(공동 : 도 국장 1 / 외부전문가1)<br>- 위원장은 내·외부 위원 공동체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단수 운영<br>• 위 원 : 도, 전발연, 유관기관, 대학교 등 관련 전문가<br>- 내부(당연직) : 도(소속 국장/과장), 전발연(관련 연구위원 1명)<br>- 외부(임의직) : 연구기관(연구위원), 유관기관(임직원), 대학교(전공 교수) 등 전문가 |
| 구성인원 | • 분과위별 10 ~ 20인 정도(도, 연구원 참여자 포함) |
| 주요역할 | • 회의 개최 등 운영 로드맵 수립·추진<br>• 분과위별 사업 아젠다 및 발굴 대상사업 검토·선정<br>• 발굴사업에 대한 사업기획서 작성<br>(PM 주관)한다.5개 분과위 운영 실무 협의(위원구성, 추진방안, 예산 집행 등) |

-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관계기관 역할 분담은 다음(그림 19)과 같다.

- 국책사업 발굴단, 전북도청, 전북발전연구원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그림 19) 전북발전연구원 국책사업 추진 체계

○ 국책사업발굴단의 추진 절차와 담당기관 다음(그림 20)과 (그림 21)에 정리된 바와 같다.

- 도 실·국과 전북발전연구원의 공동 주관 하에, 각 단계별로 주요역할을 수행하여 국책사업 발굴을 추진하며, 총 6단계로 진행한다.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 <6단계> |
|---|---|---|---|---|---|---|---|---|---|---|
| 아젠다 및 대상사업 선정 | ⇨ | 사업기획서 작 성 | ⇨ | 중간보고회 | ⇨ | 기획서 보완 | ⇨ | 최종보고회 | ⇨ |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화 |
| 분과위 | | 전발연 | | 도/전발연 | | 전발연 | | 도/전발연 | | 도(실국) |
| ('14. 3~4) | | ('14. 4~5) | | ('14. 6) | | ('14. 7~8) | | ('14. 9) | | ('14. 9) |

(그림 20) 전북발전연구원 국책사업발굴단 추진 절차

| 추 진 내 용 | 주 관 |
|---|---|
| '14년 국책사업 운영계획 수립<br>(분과별 세부 운영계획서 등) | 전북발전연구원<br>+<br>도(정책기획관실) |
| ⇩ | |
| 분과별 국책사업 아젠다 발굴<br>(시군 아젠다 발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분과 포럼별 |
| ⇩ | * 시군, 분과별 정책고문단, 포럼 간사를 중심으로 아젠다 발굴 제안 등 |
| 분과별 아젠다 확정 및<br>전문가 위원 선정 등 | 전북발전연구원 |
| ⇩ | |
| 아젠다별 국책사업화 | 분과 포럼별 |
| ⇩ | * 중앙부처 의견수렴 등 아젠다별 사업구체화 및 사업기획서 작성 |
| 국책사업 발굴사업 중간보고(1차)<br>(기획관리실장) | 전북발전연구원<br>+<br>도(정책기획관실) |
| ⇩ | |
| 국책사업 세부계획서 작성 | 분과 포럼별 |
| ⇩ | * 사업 당위성, 구체화, 경제성 분석 등 세부사업계획 |
| 국책사업 발굴사업 중간보고(2차)<br>(행정부지사) | 전북발전연구원<br>+<br>도(정책기획관실) |
| ⇩ | * 분과별 국책사업에 대한 교차 자문 |
| 국책사업 완성도 제고 | 분과 포럼별 |
| ⇩ | * 사업내용 수정·보완 |
| 국책사업 발굴사업 최종보고(3차)<br>(도지사) | 전북발전연구원<br>+<br>도(정책기획관실) |

(그림 21) 전북발전연구원 국책사업발굴단 추진 절차 및 역할

### 4) 부산광역시 「공공투자분석센터」 설치운영

#### (1) 부산시 공공투자분석센터 조직 구성

○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공공투자분석팀을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였다.

- 현재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적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6명이다.

<표 32> 부산시 공공투자분석센터 조직 구성

| 구분 | 역할 | 주요 업무 |
|---|---|---|
| 투자 1팀 | 공공투자사업 | 예비타당성사업 대응<br>투융자사업 타당성 조사 |
| 투자 2팀 | 민간투자사업 | 민간투자사업 대응 |

#### (2) 부산시 공공투자분석센터 주요 업무

○ 공공투자분석센터 주요 업무는 부산광역시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분석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 예비타당성 신청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자문과 검토
-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한해 사전 예비타당성 분석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 대응 업무
- 예비타당성조사 매뉴얼화
- 사업문야별 예비타당성 수행지침, 우수사례 등을 DB화 함

○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 검토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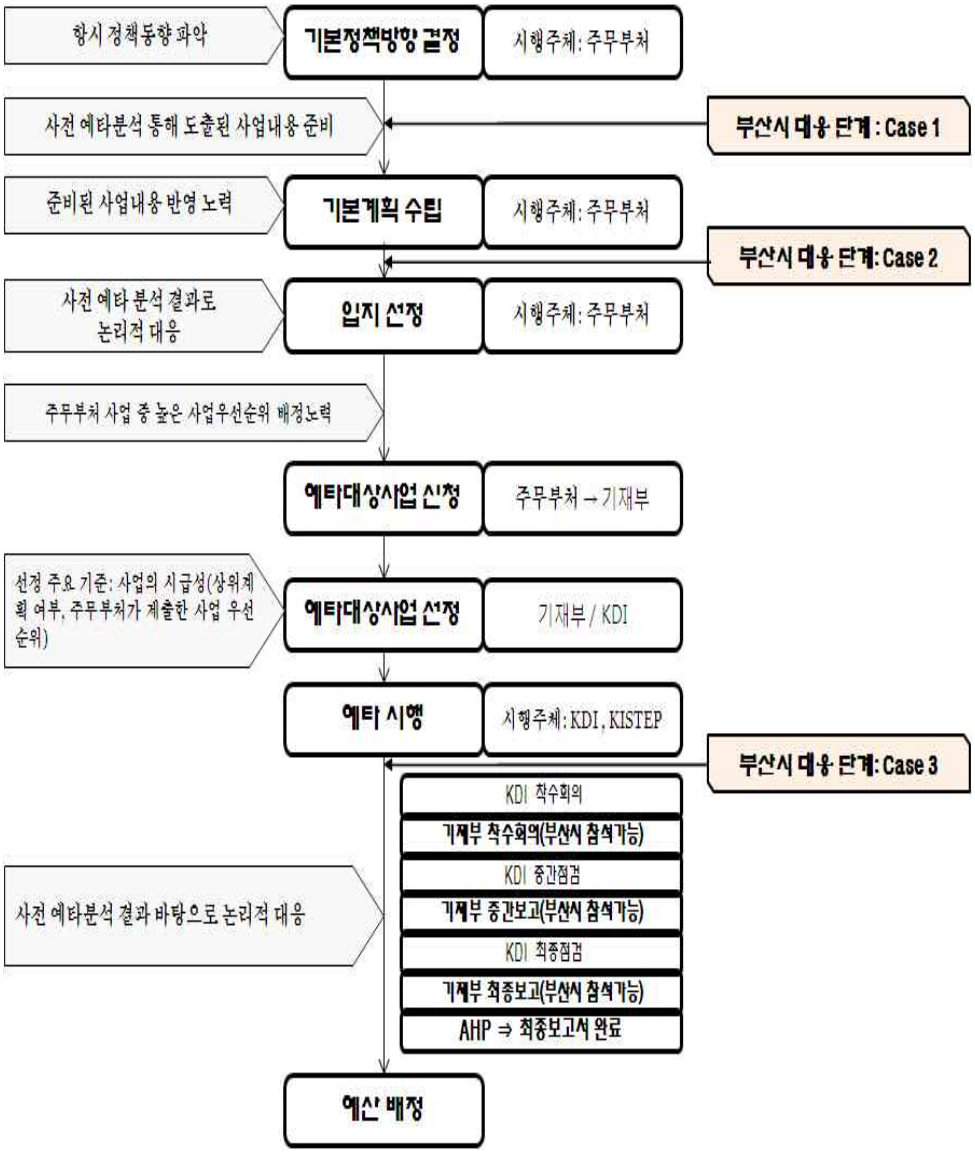
-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적합성을 검토
- 사업부서가 수행한 타당성분석의 적합성을 검토

○ 민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검토 업무를 지원한다.

- 민간제안사업 적경성 조사 요청 전 정책적 검토를 수행
- 민자사업 평가 업무대행, 민자사업협상업무 지원, 운영기간 중 쟁점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재원조달 등), 기타 민간투자사업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

### (3) 부산시 국책사업 추진 절차

○ 부산시 국책사업 추진 절차는 다음 (그림 22)에 정리된 바와 같다.




- 김난주(2013), 부산지역 국비공모사업 성공사례 및 연구원의 역할, 충남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그림 22) 부산광역시 국책사업 추진 절차

(4) 부산시 국책사업 추진 절차 시사점

○ 항시 정부정책 동향 파악

- 중앙정부의 정부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중장기계획과 부합성, 사업의 시급성 항시 검토하고 있다.

○ 주부무처 기본계획 수립시 준비된 사업 내용 반영 노력

- 중앙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이 결정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에 준비된 사업내용을 기본계획 반영시기 위해서 부산시는 노력하고 있다.
- 국가 중장기계획이나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시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전타당성 분석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준비

- 주무부처에 사업을 신청하기 전 부산시의 공공투자분석센터는 사전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채택가능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주부부처 사업 중 높은 우선순위 배정 노력

- 사전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리적 대응 강화하여 주부부처 사업중 우선순위 가능성 높이고자 하고 있다.

○ KDI, KISTEP 예비타당조사 기관과 논리적 대응 강화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할 경우 부산시는 사업논리 및 분석결과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점검 회의 때 긴밀하게 대응하여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 2. 사례 검토 요약 및 시사점

### 1) 타지역 국책사업 대응체계 요약

○ 2013년 12월 기준으로, 각 광역 지자체별로 국책사업 대응체계 구축현황은 다음의 <표 33>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33> 타 지역들의 국책사업 진행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사례

| 지역 | 명칭 | 조직 | 연간예산 | 주요 업무 | 비고 |
|---|---|---|---|---|---|
| 서울 | 공공투자 관리센터 | **총 13명**<br>- 센터장(1명)<br>- 팀 장(3명)<br>- 연구원(9명) | 약 11억 | 1. 재정사업 분야<br>- 투융자심사 위한 타당성 검토, 조사<br>2. 민간투자 분야<br>- 적정성, 타당성 조사 | 투융자심사 (서울시 자체사업) |
| 부산 | 공공투자 관리센터 | **총 6명**<br>- 센터장(1명)<br>- 팀 장(2명)<br>- 연구원(3명) | 약 4억5천 | 1. 신규 국책사업 분야*<br>- 예타사업 추진지원<br>2. 재정사업분야**<br>- 투융자사업 심사지원 | KDI 경력인력 초빙 |
| 충북 | 공공투자 분석센터 | **총 4명**<br>- 센 터 장(1명)<br>- 전문 위원(1명)<br>- 전임연구원(2명) | 약 3억5천 | 1. 신규 국책사업 분야*<br>- 예타사업 추진지원<br>2. 재정사업분야**<br>- 투융자사업 심사지원 | 센터장 KDI에서 초빙 |
| 경남 | 2014년 센터 설립 추진 중 | | | | - |
| 전북 | 범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원 전 구성원이 대응 | | | | - |

* 신규국책사업 분야는 사업비가 500억이상, 국고지원 300억 이상인 경우 사업 추진 지원(사업 적절성, 경제성 분석(B/C) 지원, 중앙부처 대응 및 협의 지원 등)
** 재정사업분야는 투융자사업 타당성(B/C 포함)을 분석·평가하여 사업시행 여부 판단 후 지원

### 2) 시사점

○ 워크숍 및 타지역 사례조사 작업을 통해 도출된 충남의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 <표 3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4> 타 지역 국책사업 대응체계 시사점

| | 내용 |
|---|---|
| ① | • 국책사업의 성패확인은 장기간을 요하며, 계속된 피드백 작업 요구 |
| ② | • 국책사업의 채택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평가작업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기획) 준비가 필요 |
| ③ |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규 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해 관련조직 정비 중임 (전담조직 설치, 관련 D/B 및 노하우(know-how) 축적) |
| ④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투융자 심사의 강화 |

- 참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 심사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평가작업이 이루어진다.
- 이 외에 센터들에서는 의뢰된 개별 투융자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평가하고, 분석자료와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 3. 충남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과제

## 1) 충남 주요 기관별 역할과 기능의 한계

○ 충남연구원의 산업경제부는 도정의 현안과제와 주요 전략과제, 각종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전담하여 기획하고 조사·분석 및 평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의 문제와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국책사업 추진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될 경우 도정의 현안과 각종 시군에서 요청하는 과제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연구 성과물의 질적 수준도 하락될 여지가 있다.
- 설령 연구원에서 대형 국책사업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전념할 수가 없고 필요한 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분야와 같이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분야는 연구원 내에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한편 충남테크노파크는 디스플레이, 의약바이오, 자동차 등의 주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 및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분야의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연구개발분야가 연구기반조성사업인 경우 건설 사업이 포함될 수 있으며, 충남테크노파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왜냐하면 연구시설 및 인프라설치 등의 연구기반조성사업은 사업규모, 위치, 용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지역개발 등의 업무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이처럼 충남의 주요기관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유의 역할로 인해 사업추진을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사업계획에 대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을 조율하기에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 결국 충남 주요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한 결과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구성과 통합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기관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국책사업 추진 과정의 주체별 역할과 역량 요약*

| 구분 | | 충청남도 | 충남테크노파크 | 충남연구원 | 도정자문교수단 | 비고 |
|---|---|---|---|---|---|---|
| 사업 Item 발굴 | Item 및 아이디어 제출 | ○ | ○ | ○ | ○ | 브레인스토밍 필요 |
| | B/S조직화 및 정리 | | ● | | | |
| 기획서 작성 | 기본구상(안)초안 | ○ | ● | ○ | 자문 | |
| | 기획서 작성 | - | △ | △ | | 외부용역(전문 엔지니어링사)의뢰 |
| 평가 | | | | △ | 자문 | |
| 사업대안 vs. 사전평가 결과 Feedback 과정 조율 | | | | - | 자문 | |
| 국책사업 절차 진행 | | ● | △ | △ | | △ 지원기능 수행 |
| 홍보 및 로비 | | ● | ○ | ○ | | 지역 정치인/언론 |
| 기타 | | 전담 대응체계 필요 | | | | 공공투자유치 지원센터 |

- ● : 매우 적합, ○ : 적합, △ : 보통, - : 미흡
- *: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율 및 조정과정 필요

### 2) 충남 국책사업 추진과정 각 단계별 문제점과 과제

○ 첫째,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할 사업의 발굴과 사업계획수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 둘째, 타시도의 경우 발굴된 사업을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결정단계부터 반영시키는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충남은 국가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경로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

○ 셋째, 신규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사업구상단계에서 사전 타당성 분석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사업의 채택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하나, 피드백 과정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넷째, 대형 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기능과 역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비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현재 국책사업 추진은 충청남도와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연구원, 외부 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별사업 단위로 대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충남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들을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표 36>와 같다.

<표 36> 충남 대형 국책사업 추진 단계별 문제점과 과제

| 구분 | 문제점 | 과제 |
|---|---|---|
| 사업발굴단계 | • 충남도청, 충남TP 주관,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한 국책사업 발굴 기획은 단발적 진행 | • 지속적 국책사업 발굴과 사업화가 필요<br>• 사업 성격과 중앙부처 예산 항목에 따라 국책사업 수정·보완 필요 |
| 사전평가단계 | • 발굴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분석이 고려되지 않고 추진됨<br>• 사업구상과 사전평가의 feedback 단절 | • 사전분석에 근거한 사업구상으로 국비확보 가능성제고 필요<br>•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분석결과와 사업구상 사이의 지속적인 Feedback 필요 |
| 협의 및 대응 단계 | • 중앙부처의 우선순위 사업 배정 대응 미흡<br>•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KDI 및 KISTEP과 지속적인 협의 및 대응 미흡 | • 체계적, 조직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br>• 과제 완료 후 지속적 대응 필요 |

# Ⅴ. 충남 대형 국책사업 대응체계(안)

## 1. 충남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지원체계 구축

○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충남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유치와 도내 공공투자(투융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 이의 구체적 대안으로서, 충남 공공투자 유치지원 및 관리센터가 제안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충남 공공투자 유치지원 및 관리센터(CAMP)의 설치

○ 충남연구원 내, 충남 공공투자 유치지원 및 관리센터(a center for attracting and managing of public investment, CAMP)의 설치 및 운영하여 대형 국책사업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센터의 주 업무는 500억 이상의 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을 기획지원, 조사·분석지원 및 평가, 논리개발 등에 역점을 둔다.

- 또한 기획관리실, 경제통상실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충청남도의 정책 사업을 실현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센터에서는 부수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500억 미만의 국비사업들에 대한 도내 유치지원을 수행한다.

○ 이 외에 센터에서는 도내 각종 투융자 심사에 대해 지원한다.

- 투융자심사의 지원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충남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해 제안자들로부터 제출되는 자료[8]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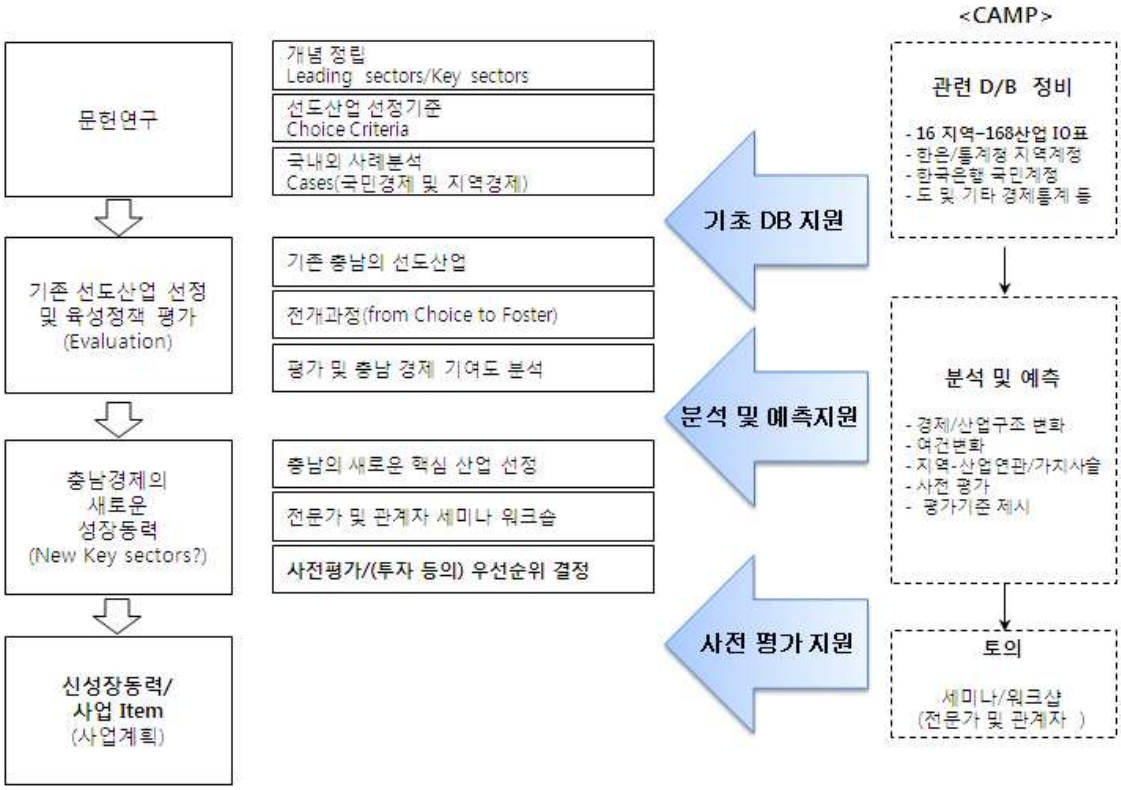
8) 참고로 개별 투융자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는 심의위원회에 접수되기 전에 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함

## 2) 충남 공공투자 유치지원 및 관리센터의 기능

○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기본 기능은 (그림 25)에 포함된 바와 같이, 크게 3가지(기획지원, 분석 및 평가지원, 협의·대응 지원)로 구분된다.

### (1) 기획 지원 기능

○ 충남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신 성장 동력/사업 Item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기초 DB 자료 분석, 정책동향 분석 및 전망, 사업선정 등의 기획기능을 지원한다.




(그림 23) 예시: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국책사업 기획과정의 지원

○ 사업기획 및 계획수립의 주체는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충남도청과 충남테크노파크이며, 충남연구원 핵심사업의 경우 충남도청과 충남연구원에서 담당한다.

- 추진 사업 유형별 사업기획 및 계획수립주체는 다음<표 37>와 같다.
- 대형 국책사업이 발굴되어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는 충남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서

관련계획을 수립한다.

<표 37> 대형 국책사업(국비지원)의 기획과 계획수립 주체

| 구분 | 사업 기획 및 계획수립 주체 | 비고 |
|---|---|---|
| 충남연구원 핵심사업* | 충남도청 · 충남발전연구권 (센터: 조직화 및 조정 담당) | 일부 R&D 사업 포함 |
| 非R&D사업 | | 일부 외주 |
| R&D사업 | 충남도청 · 충남테크노파크 | |

* 충남연구원 핵심사업: 도의 주요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범 연구원 차원에서 집중하는 사업을 의미,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수산 및 해양 등 관련 R&D 사업 포함

### (2) 사전평가 지원 기능

○ 대형 국책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경우 사전타당성 분석 및 평가를 지원한다. 단, 용역발주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충남도청이나 충남테크파크에서 공공투자센터에게 용역을 발주하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다.

○ 충청남도 도내 투융자심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감수 작업을 통해 사업성검토 및 심사를 지원한다.

○ 사업 유형에 따라 평가지원 업무를 구분하면 다음 <표 38>와 같다.

<표 38> 평가지원 업무 구분

| 구분 | 공투센터 수행업무 | 비고 |
|---|---|---|
| 대형 국책사업<br>(국비지원) | - 타당성 분석 및 평가*<br><br>- 사업계획과 분석결과 피드백(feedback)<br><br>- 계획 수정·보완 | - 용역발주 필요시<br>(발주: 도·TP→센터)<br>- 사업내용 구체성 제고<br>·육하원칙(5W-1H)입각 수립<br>·합리적 수준 기간/비용 |
| 도내 투융자사업 | - 감수<br>- 사업성 검토, 심사 지원 | <감수><br>- Pass/Fail 판단<br>- Fail: 서류 재작성 요구<br>(충남도 → 수행기관) |
| 도내 계획 및 정책사업 평가 | - 감수 | |

* 국책사업 추진 과정 중 제출해야 할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기본구상』과 『**사업 타당성분석』의 동시 진행 및 피드백 과정이 필요함(국비공모 지원과정에 제출되는 사업계획서는 타당성보고서, 계획보고서 두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

### (3) 협의·대응 지원 기능

○ 주부부처 사업중 우선순위를 배정 할 때 충남에 추진하려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대응 한다.

○ KDI 및 KISTEP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시 사전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논리적 대응을 한다.

○ 예타조사 절차에서 사업재검토, 사업계획 변경 요구시 수정보완 대응을 지원한다.

### (4) 기타 지원 기능

○ 발굴된 사업 자료를 DB화하여 구축하고 사업유형별 국책사업 추진 매뉴얼 작업 및 체크리스트를 수정 보완 작성한다.

○ 교육 및 홍보

- 국책사업 추진 및 타당성 분석·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책사업 추진시 원활한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공무원 및 국책사업 추진 관계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3) 충남 공공투자 유치지원 및 관리센터 주요 사업

#### (1) 기획 지원 사업

○ 사업 기획 단계부터 경제성 확보를 위한 편익과 비용의 사업 항목화 검토, 경제성 분석 가능, 타당성분석 및 종합평가 지원을 실시한다.
- 사업구상과 사전분석의 feedback 강화
- 非 연구개발분야 사업기획 추진 검토, 사업기획팀과 경제분석팀의 협의체계를 구축

#### (2) 사전평가 지원 사업

○ 다수 사업아이템은 공공투자유치 지원센터에서 사전 타당성분석 및 검토 수행한다.
- 다양한 사업아이템 중 사전 분석을 통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지역의 적합성이 우수한 사업 우선 선별
- 최종 선정된 2~3개 사업은 예타심사를 위한 세부적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충남도청에서 외부용역 발주, 사업기획(안) 보고서 작성
- 구체적 사업(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수행

#### (3) 협의/대응 지원 사업(국책사업 과정 맞춤형 패키지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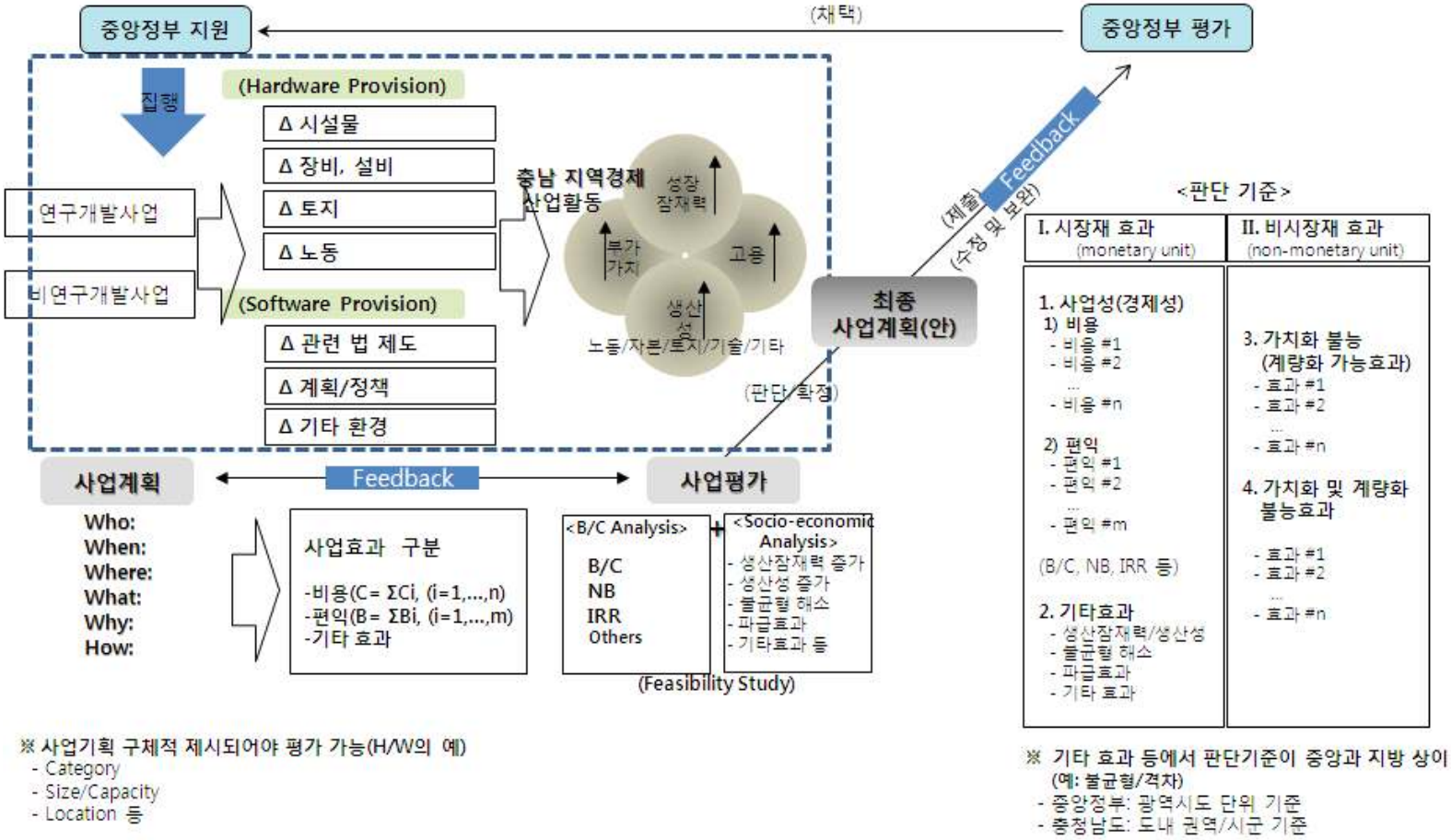
○ 국책사업 평가기관에 지속적 대응을 위해 데이터 백업 및 수정 보완한다.
- 이러한 지원기능은 국책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 결정 및 집행 때까지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4) DB구축 사업(지역경제계정 구축, 지역 중심의 교통량DB 구축, 국책사업 관련 자료 DB화 사업)

○ 지역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지역경제계정 기초데이타를 구축하고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지원한다.

○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통량 DB를 구축하고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SOC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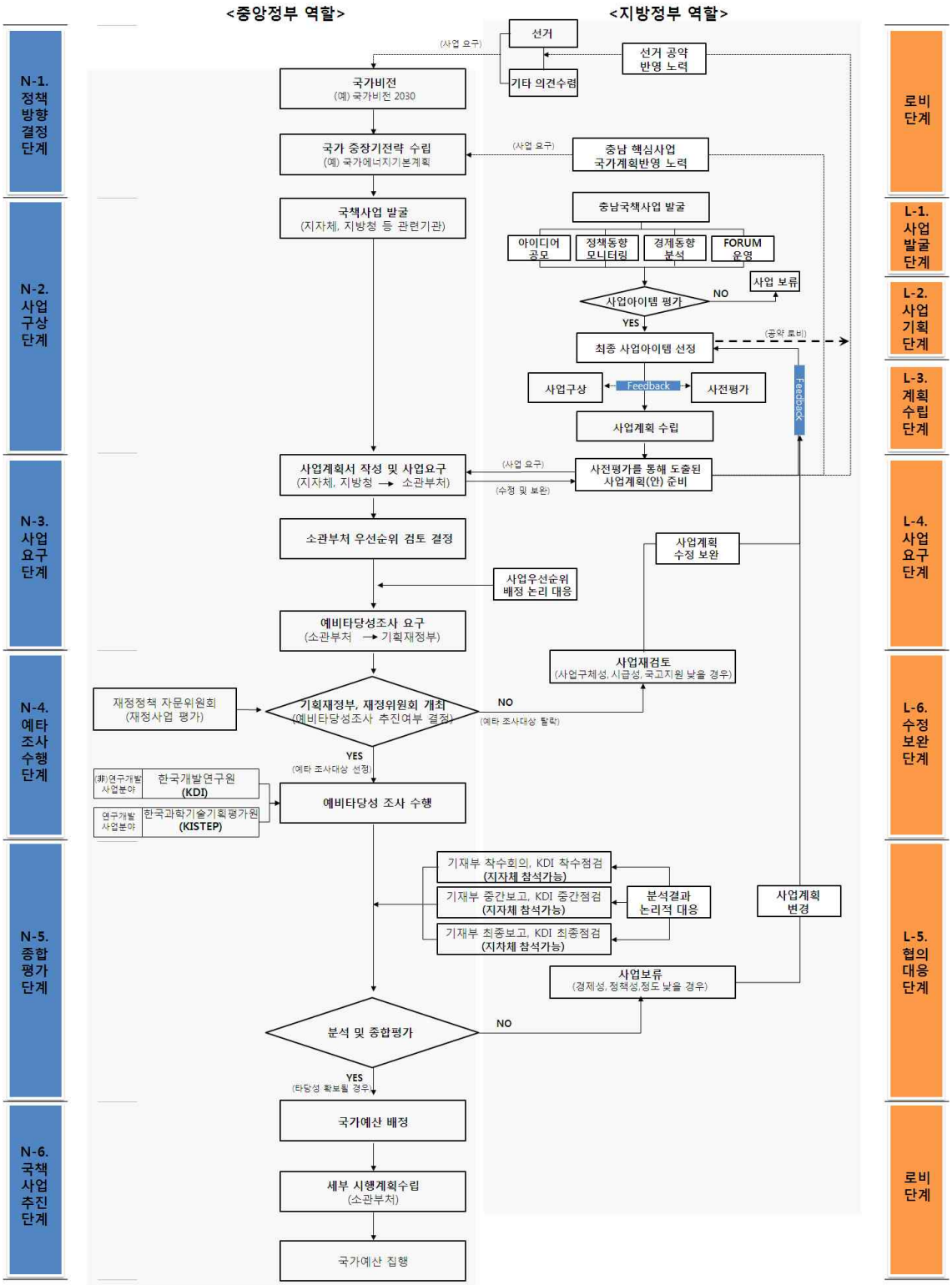
※ 참고로 2015년 1월 1일자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내에 공공투자연구팀이 설치되어 지금까지 설명된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조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림 24) 예시:충남 공공투자 유치지원 및 관리센터 수행 체계

## 4) 충남 대형 국책사업 추진 절차 개선(안)

### 가. 중앙 및 지역 단위에서의 절차 구분



나. 주체별 단계별 대응

※ 이하의 내용은 교통 SOC 부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보완과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함

## ■ 건설사업 및 기타재정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진행과정과 주체별 역할

| 구분 | | 역할 | | 충청남도 | | | |
|---|---|---|---|---|---|---|---|
| | | | | 도청 | | 시군구 | 기타 (교육청·환경청 등) |
| | | | | 정책기획관실 | 행정부서 | | |
| L-1 사업발굴단계 | 1 | 정책동향 모니터링 | 첩보수집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취합정리 | ○ | | | |
| | 2 | 아이디어 발굴 | 제안 | ● | ○ | ○ | ○ |
| | | | 검토 | ○ | | | |
| | 3 | 사업발굴 관련 연구조성 | 섭외 및 조성 | ○ | ○ | | |
| | | | 전문가 워크숍 | | | | |
| | | | 자료정리·보고 | | | | |
| | 4 | 경제동향 분석 | 경제동향 분석 | | | | |
| | | | 취합정리 | | | | |
| | 5 | 사업발굴 결과 정리 및 보고 | 사업발굴결과정리 | | | | |
| | | | 보고 | | | | |
| | | | 홍보 | ○ | | | |
| | 6 | 국비사업 발굴 FORUM | 섭외 및 구성 | ○ | ○ | ○ | ○ |
| | | | 전문가 워크숍 | | | | |
| | | | 결과보고 | ○ | | | |
| L-2 사업기획단계 | 7 | 사업기획 | 공모절차 확인 | ○ | | | |
| | | | T/F 구성 | ○ | ○ | | |
| | | | 기획안 작성 | | | | |
| | | | 기획안 확정 | ● | | | |
| | 8 | 홍보 | | ○ | | | |
| L-3 사업계획수립단계 | 9 | 사업 계획수립 | 사업계획 발주 | ● | ○ | ○ | |
| | | | 사업구상(a) | | | | |
| | | | 타당성분석(b) | | | | |
| | | | 피드백(a+b) | | | | |
| | | | 지역 내 자문 | | | | |
| | | | 유관기관 자문 | | | | |
| | | | 수정 및 보완 | | | | |
| | | | 계획(안) 확정 | ○ | | | |
| | 10 | 협의 | 기초자료제출 | ○ | ● | | |
| | | | 사업설명 | ○ | ● | | |
| | | | 조사결과협의 | ○ | ● | | |
| | 11 | 홍보 및 로비 | 홍보 | ○ | | | |
| | | | 로비 | ○ | ○ | | |

●: 매우적합, ○: 적합
(표 계속)

| 구분 | | 역할 | | 충청남도 | | | |
|---|---|---|---|---|---|---|---|
| | | | | 도청 | | 시군구 | 기타 (교육청·환경청 등) |
| | | | | 정책기획관실 | 행정부서 | | |
| L-4 사업요구단계 | 12 | 사업계획서 및 부대서류 준비 | | 지원 | ● (담당부서) | | |
| | 13 | 신규사업요구 | 접수 | ○ | ● | | |
| | | | 사전 피드백 | ○ | ● | | |
| | | | 수정보완 재접수 | ○ | ● | | |
| | 14 | 예타조사 요구사업 검토과정 | | 중앙 주무부처 →기재부/미래부 접수 →예타대사업 분류/선정 | | | |
| L-5 협의대응단계 | 15 | (선정시) 충남의 대응 | 요구자료 준비 | ○ | ● | | |
| | | | 자료 제출 | ○ | ● | | |
| | 16 | (탈락시) 충남의 대응 | 탈락사유 확인 | ○ | ● | | |
| | | | 수정보완 | ○ | ● | | |
| | | | 재접수 | ○ |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과정 | | 기재부/미래부 → KDI/KISTEP 조사의뢰 → 조사 | | | |
| | 17 | 충남의 대응 | 예타 간접참여 | ○ | ● | | |
| | | | 의견제출 | ○ | ● | | |
| | | | 로비 | ●(지사) | | | |
| | | 예비타당성 종합평가 | | KDI/KISTEP 조사 → 결과통보 → 기재부/미래부 종합평가 | | | |
| | 18 | (채택시) | | 사업실시계획 수립 → 예산 조정 및 배분 → 사업추진 | | | |
| L-6 수정보완단계 | 19 | 문제점 진단 | 결과검토 | ○ | ● | | |
| | | | 이의 신청 | ○ | ● | | |
| | | | 원인규명/진단 | ○ | ● | | |
| | | | 향후계획 제출 | ○ | ● | | |
| | 20 | 사업내용 조정 | B/C 확보방안 모색 | | | | |
| | | | 기타 타당성 확보방안 모색 | | | | |
| | | | 사업 조정안 확정 | | ● (담당부서) | | |
| | | | 사업계획서 수정 | 지원 | ● (담당부서) | | |
| | | (과정 Ⅰ부터 재시도) | | | | | |
| | 21 | 사업재요구 | 접수 | ○ | ● | | |

●: 매우적합, ○: 적합

## ■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진행과정과 주체별 역할

| 구분 | | 역할 | | 충청남도 | | | |
|---|---|---|---|---|---|---|---|
| | | | | 도청 | | 시군구 | 기타 (교육청·환경청 등) |
| | | | | 정책기획관실 | 행정부서 | | |
| L-1 사업발굴단계 | 1 | 정책동향 모니터링 | 첩보수집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취합정리 | ○ | | | |
| | 2 | 아이디어 발굴 | 제안 | ○ | ○ | ○ | ○ |
| | | | 검토 | ○ | | | |
| | 3 | 사업발굴 관련 연구조성 | 섭외 및 조성 | ○ | ○ | | |
| | | | 전문가 워크숍 | | | | |
| | | | 자료정리·보고 | | | | |
| | 4 | 경제동향 분석 | 경제동향 분석 | | | | |
| | | | 취합정리 | | | | |
| | 5 | 사업발굴 결과 정리 및 보고 | 사업발굴결과정리 | | | | |
| | | | 보고 | | | | |
| | | | 홍보 | ○ | | | |
| | 6 | 국비사업 발굴 FORUM | 섭외 및 구성 | ○ | ○ | ○ | ○ |
| | | | 전문가 워크숍 | | | | |
| | | | 결과보고 | ○ | | | |
| L-2 사업기획단계 | 7 | 사업기획 | 공모절차 확인 | ○ | | | |
| | | | T/F 구성 | ○ | ○ | | |
| | | | 기획안 작성 | 구성된 T/F에서 작성 제출 | | | |
| | | | 기획안 확정 | ● | | | |
| | 8 | 홍보 | | ○ | | | |
| L-3 사업계획수립단계 | 9 |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 발주 | ● | ○ | ○ | |
| | | | 기본구상(a) | | | | |
| | | | 타당성분석(b) | | | | |
| | | | 피드백(a+b) | | | | |
| | | | 지역 내 자문 | | | | |
| | | | 유관기관 자문 | | | | |
| | | | 수정 및 보완 | | | | |
| | | | 계획(안) 확정 | ○ | | | |
| | 10 | 협의 | 기초자료제출 | ○ | ● | | |
| | | | 사업설명 | ○ | ● | | |
| | | | 조사결과협의 | ○ | ● | | |
| | 11 | 홍보 및 로비 | 홍보 | ○ | | | |
| | | | 로비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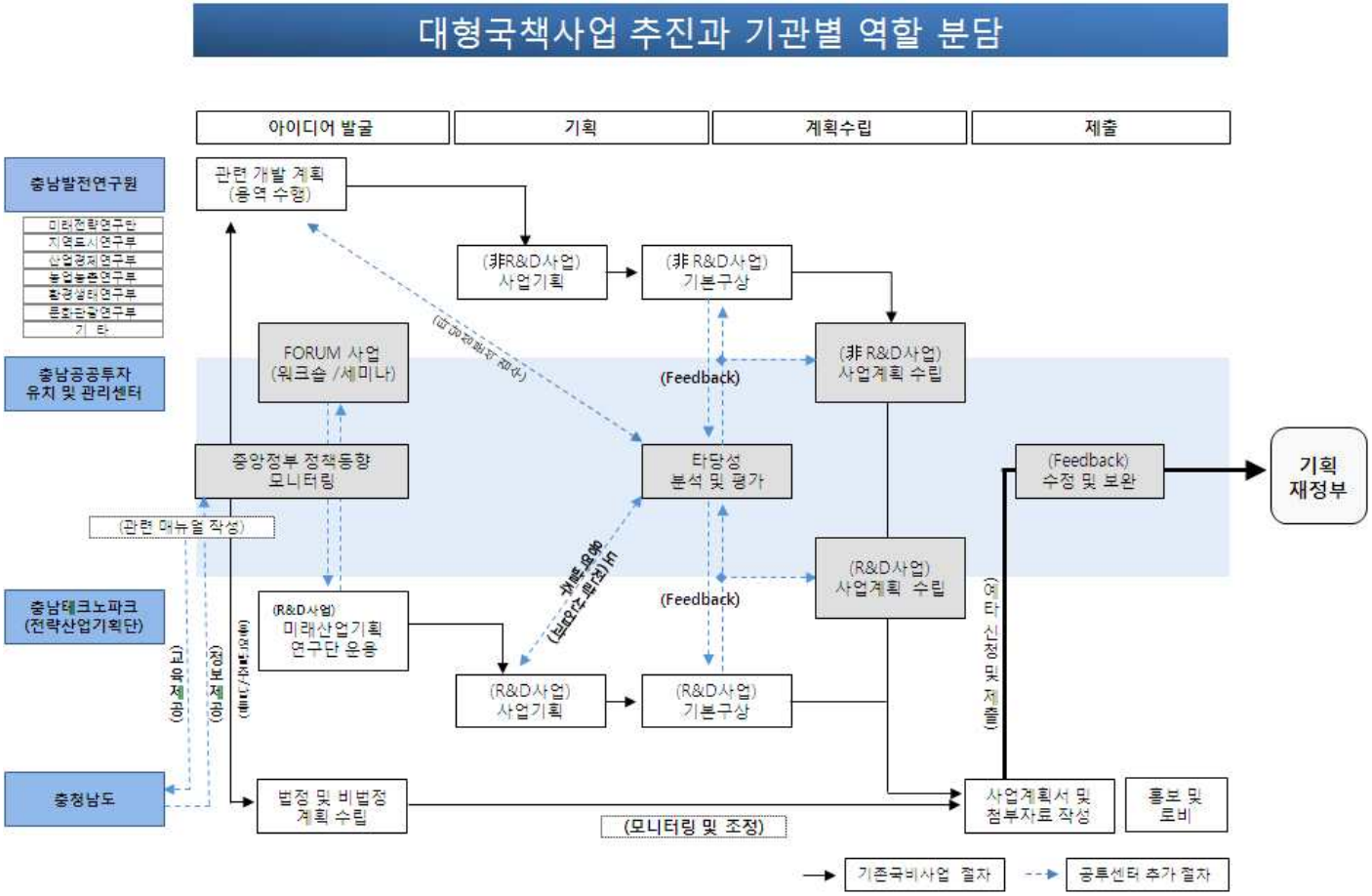
●: 매우적합, ○: 적합

(표 계속)

| 구분 | | 역할 | | 충청남도 | | | | |
|---|---|---|---|---|---|---|---|---|
| | | | | 도청 | | 시군구 | 기타 (교육청·환경청 등) | |
| | | | | 정책기획관실 | 행정부서 | | | |
| L-4 사업요구단계 | 12 | 사업계획서 및 부대서류 준비 | | 지원 | ● (담당부서) | | | |
| | 13 | 신규사업요구 | 접수 | ○ | ● | | | |
| | | | 사전 피드백 | ○ | ● | | | |
| | | | 수정보완 재접수 | ○ | ● | | | |
| | | 예타조사 요구사업 검토과정 | | 중앙 주 | | | | |
| L-5 협의대응단계 | 14 | (선정시) 충남의 대응 | 요구자료 준비 | ○ | ● | | | |
| | | | 자료 제출 | ○ | ● | | | |
| | 15 | (탈락시) 충남의 대응 | 탈락사유 확인 | ○ | ● | | | |
| | | | 수정보완 | ○ | ● | | | |
| | | | 재접수 | ○ | ● | | | |
| | |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과정 | | 기 | | | | |
| | 16 | 충남의 대응 | 예타 간접참여 | ○ | ● | | | |
| | | | 의견제출 | ○ | ● | | | |
| | | | 로비 | ●(지사) | | | | |
| | | 예비타당성 종합평가 | | KDI/KI | | | | |
| | | (채택시) | | 사업 | | | | |
| L-6 수정보완단계 | 17 | 문제점 진단 | 결과검토 | ○ | ● | | | |
| | | | 이의 신청 | ○ | ● | | | |
| | | | 원인규명/진단 | ○ | ● | | | |
| | | | 향후계획 제출 | ○ | ● | | | |
| | 18 | 사업내용 조정 | B/C 확보방안 모색 | | | | | |
| | | | 기타 타당성 확보방안 모색 | | | | | |
| | | | 사업 조정안 확정 | | ● (담당부서) | | | |
| | | | 사업계획서 수정 | 지원 | ● (담당부서) | | | |
| | | (과정 Ⅰ부터 재시도) | | | | | | |
| | 19 | 사업재요구 | 접수 | | ● | | | |

●: 매우적합, ○: 적합

5)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 기관별 역할 분담



## 2. 도내 공공투자 사업 관리 강화

○ 2013년 충청남도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약 80여건의 투융자 심사가 요청되고 있다.

- 충청남도의 가용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채택여부와 우선순위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 이 과정에서 개별사업들의 경제성을 포함한 타당성의 분석과 평가결과는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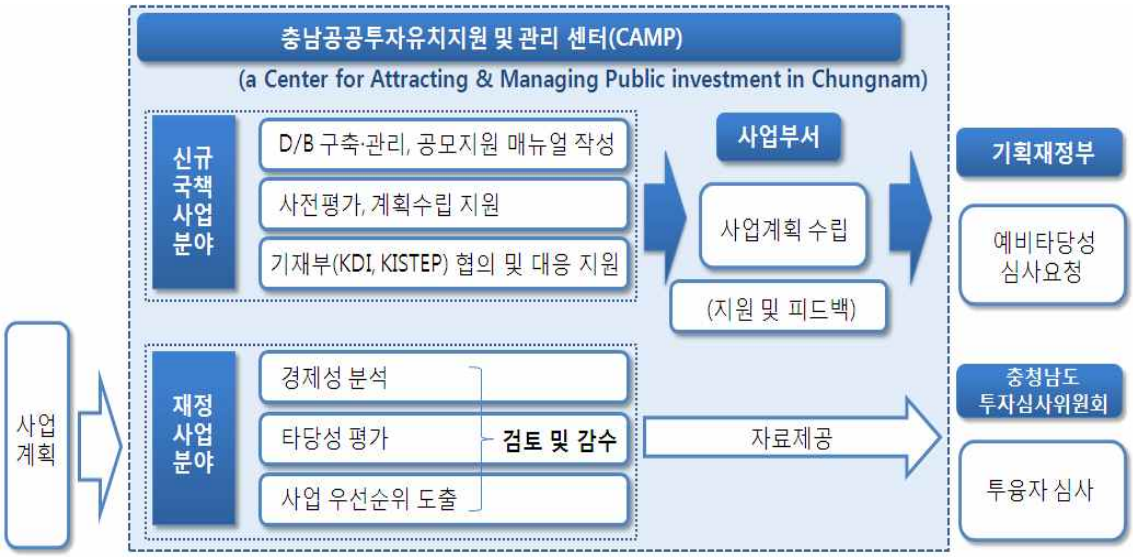
○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내 투융자심사에 제출된 사업들은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 작업이 포함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이 외에도 도내 각종 (법정 및 비법정)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다.

○ 또한 도내 각종 공공투자 사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도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사업과 유사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도내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내 재전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해야한다.
- 따라서 도내 투융자사업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수립된 사업계획 내용을 경제성,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투융자 심사 시 센터는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센터 설립시 투융자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27)과 같다.




(그림 25) 충남 도내 투융자심사 지원을 위한 CAMP 역할

# 3. 공공투자 유치지원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 1) 인력구성(안)

○ 초기(최초 3년): 센터장, 전임연구원(B/C analysis 및 CVM 가능자) 3인 등 4~5인으로 구성한다.

- 소규모 非 R&D 사업 위주, Knowhow 및 D/B,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대응 매뉴얼 작성에 초점)

○ 중장기: 센터장(관련 경력직 초빙 필요), 교통D/B 전담(EMME II 가능자) 박사, 전임연구원 등 (5인+ α)으로 구성한다.

- 일부 R&D 사업을 포함, 도로 · 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 대상 본격 대응

<표 32> 센터 인력구성(안)

| 구분 | 인원 |
|---|---|
| 센터장 | 1명 |
| B/C Analysis(경제성분석) | 1명(전임연구원) |
| CVM(조건부 가치추정법)* 가능자<br>(수요 및 편익 추정) | 1명(전임연구원) |
| EMME II** 가능자<br>(교통 DB관리 및 수요분석) | 1명(전임연구원) |
| 자료수집 및 행정처리 담당 | 1명(연구원) |

* CVM(조건부가치측정법) :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시장재가 아닌 비시장재의 경우 주로 사용함

** EMME II : 교통수요 관리 소프트웨어(2015.8 현재 EMME III 버전 활용가능)

## 2) 예산(안)

○ 초기(최초 3년): 3억원/년

- 인건비(센터장 외 인력), 최소운영비용(출장비 및 경상비 등)
- 세미나·회의 및 자문비, D/B 구축 및 관리비용 등

※ 이외 FORUM 사업/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평가비용 별도

○ 중장기: 5억원(센터장 초빙 및 전문가 인건비 추가 및 사업확대)

## 3) 추진계획(안)

○ 2014년 중 공공투자 유치지원 민 관리센터 설치 후 시범사업 준비와 2016년 대형 국책사업 예비타당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각 단계별 대응 체계 매뉴얼을 작성해 나간다.

-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4년 도 추경예산 반영필요하다.

<표 33> 추진계획(안)

| 구분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비고 |
|---|---|---|---|---|---|---|
| 국책사업 | 기반 구축 | (워크숍개최) | (센터 설립) | (대응매뉴얼 구축) | | 관련지침, 통계 D/B,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 |
| | 시범 사업 | | (준비) | (신청) | ⇨ (계속 반복) | 농림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소규모 사업중심 |
| | 대형 사업 | | | (사업발굴) | (신청) | 목표: (최초) 2017년 하반기 예타신청 |
| 도내 투융자심사 | | | (평가개시) | | | 지속사업 |

# 4. 충남 국책사업발굴단 운영계획(안)

○ 충남의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구상 및 기획과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산·학·연·관의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1) 추진체계

○ 총괄추진단 , 미래전략연구단, 공공투자유치지원센터, 6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 뒤의 (그림 27) 참조)

## 2) 국책사업발굴단 운영주체 및 주요 역할

○ 운영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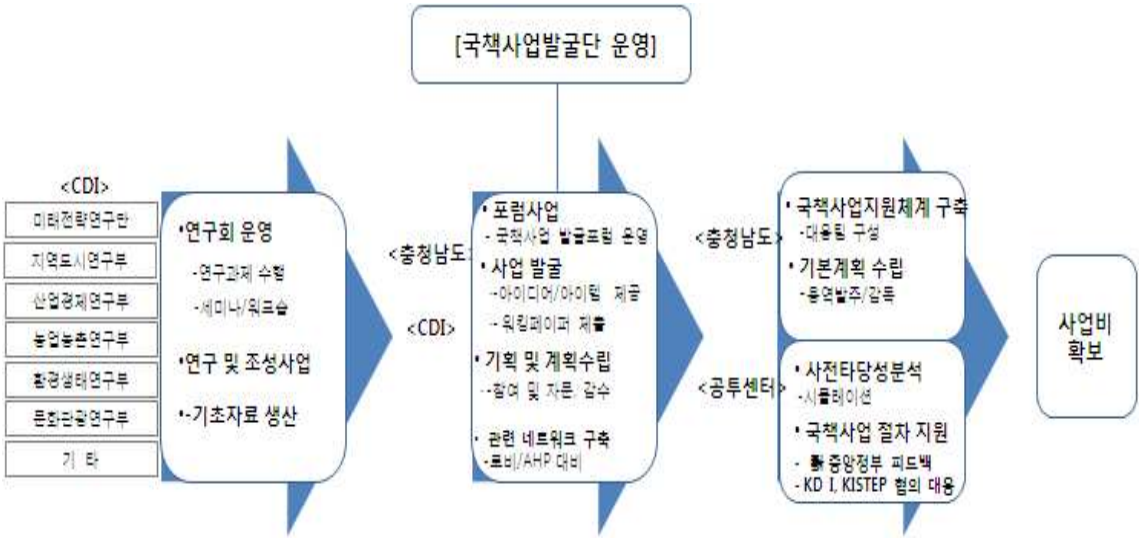
- 도청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며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공공투자지원센터가 운영을 지원한다.

○ 6개 분과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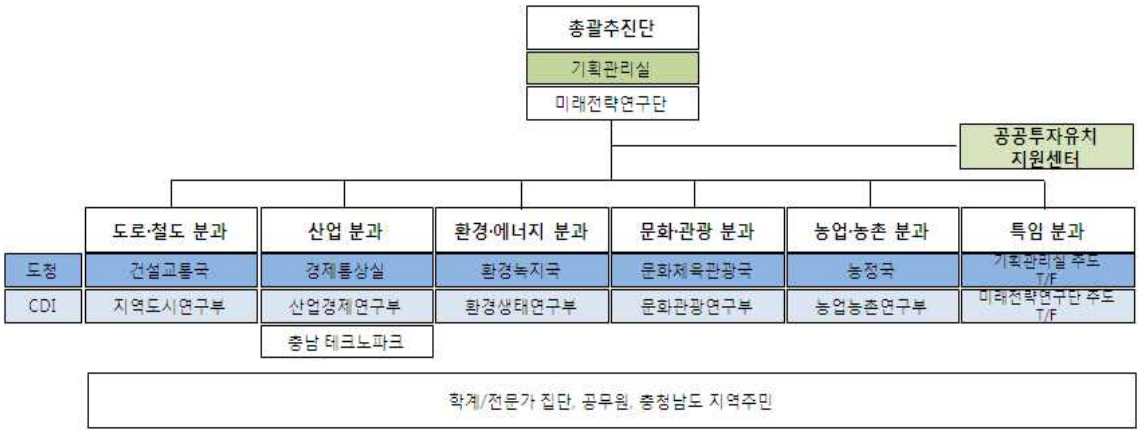
- 도로·철도분과, 산업경제분과, 환경·에너지분과, 문화·관광분과, 농업·농촌분과, 특이분과로 구성한다.

○ 주요 역할

- 대형 국책사업 발굴 및 워킹페이퍼 작성(사업아이템 개발계획 검토수준)한다.
- 발굴된 사업에 대한 분기별(개요발표 1회, 중간발표 2회, 최종발표 1회) 계획서를 발표한다.




(그림 26) 충남 국책사업발굴단 운영(안)




(그림 27) 충남 국책사업 발굴단 분과 구성

<부록 1> 지자체별 국책사업 발굴 추진현황(2010~2013년)*

| 구분 | 사업명 | 사업비 (억원) | 신청년도 | 비고 |
|---|---|---|---|---|
| 경기(4) | 고덕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 2,121 | 2012 | B/C(1.7) |
| |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사업 | 2,043 | 2011 | B/C(0.96) AHP(0.514) |
| | 농식품 허브 물류센터 건립사업 | 1,373 | 2010 | B/C(2.17) |
| | 디지털방송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 2,691 | 2009 | B/C 1.03 |
| 인천(4) | 송도컨벤시아 건립사업 | 1,851 | 2012 | B/C 1.04 |
| | 차세대뇌연구위한의료영상시스템개발사업 | 1,094 | 2011 | B/C(1.04) |
| | 녹색환경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 | 2,815 | 2010 | B/C(1.3) |
| | 국제 BIT PORT 조성사업 | 4,732 | 2009 | B/C 1.02 |
| 전북(6) | 군장항 항로준설 사업 | 1,837 | 2012 | B/C 1.08 |
| |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 | 2,563 | 2012 | B/C (1.10) |
| |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 1,736 | 2011 | B/C (1.04) |
| | 탄소밸리구축사업 | 1,991 | 2010 | B/C(1.17)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 3,779 | 2009 | B/C(0.95), AHP(0.524) |
| |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 3,595 | 2009 | B/C(1.26) |
| 전남(3) |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 | 1,433 | 2013 | B/C(4.38) |
| |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 | 785 | 2012 | B/C(0.848), AHP(0.574) |
| | 영암군 관광레저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 | 2,755 | 2012 | B/C(1.08) |
| 광주(3) | 광주제2컨센션센터 건립사업 | 1,193 | 2011 | B/C(1.21) |
| |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 1,871 | 2010 | B/C(1.05) |
|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 12,949 | 2010 | B/C(0.997) AHP(0.502) |
| 강원(2)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강원발전연구원) | 2,932 | 2011 | 1.27 (보령포함) |
| | 동해묵호항 개발사업 | 16,895 | 2012 | BC(0.94) AHP(0.578) |
| 제주(1) | 제주 돌 문화공원 관광지개발사업 | 1,227 | 2011 | B/C(1.36) |
| 충북(1) |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조성사업 | 3,306 | 2011 | B/C(1.49) |
| 대전(3) | 대전도시철도 2호선 | 13,616 | 2012 | B/C(0.91) , AHP(0.508) |
| |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 824 | 2011 | B/C(1.04) |
| |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 | 885 | 2010 | B/C(1.38) |
| | | | | |
| | | | | |

* 도로 철도 등 SOC사업 제외, 계속 보완 a;c 업데이트 중

-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구분 | 사업명 | 사업비 (억원) | 신청년도 | 비고 |
|---|---|---|---|---|
| 대구(9) |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2,328 | 2011 | B/C(1.22) |
| | 서대구공업단지 재생사업 | 1,035 | 2011 | B/C(1.18) |
| | 대구공업단지 재생사업 | 1,906 | 2011 | B/C(0.95) AHP(0.526) |
| |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 사업 | 2,451 | 2010 | B/C(1.38) |
| |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 | 974 | 2010 | B/C(1.02) |
| |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사업 | 1,200 | 2009 | B/C(2.40) |
| |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및 기술개발사업 | 1,632 | 2009 | B/C(1.08) |
| |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사업 | 1,404 | 2009 | B/C(1.06) |
| |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사업 | 902 | 2009 | B/C(1.02) |
| 경북(9) | 울릉도 공항 건설사업 | 4,932 | 2013 | B/C(1.19) |
| | 차세대 건설부품특화단지 조성사업 | 8,851 | 2011 | B/C(1.2) |
| |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 사업 | 791 | 2011 | B/C(0.85) AHP(0.50) |
|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 1,227 | 2010 | B/C(1.02) |
| |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 | 952 | 2010 | B/C(1.18) |
| |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사업 | 6,400 | 2010 | B/C(0.89) AHP(0.524) |
| | 영양댐 건설사업 | 3,139 | 2011 | B/C(0.93) AHP(0.579) |
| | 달산댐 건설사업 | 4,855 | 2011 | B/C(0.81) AHP(0.559) |
| | 4세대(X-선 자유전자레이저)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 5,467 | 2010 | B/C(0.85) AHP(0.575) |
| 경남(2) | 대전력시험설비 증설사업 | 1,735 | 2010 | B/C(1.92) |
| |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 | 6,467 | 2011 | B/C(0.88) AHP(0.502) |
| 울산(3) | 그린전기자동차부품개발및연구기반 구축사업 | 1,493 | 2010 | B/C(0.902), AHP(0.573) |
|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사업 | 2,180 | 2012 | B/C(0.99), AHP(0.506) |
| |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 19,791 | 2009 | B/C(1.42) |
| 부산(6) |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 3,594 | 2012 | B/C(1.3) |
| | 부산역 철도부지 종합개발사업 | 4,963 | 2012 | B/C(1.18) |
|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 2,817 | 2011 | B/C(0.96) AHP(0.511) |
| | 국립 부산과학과 건립사업 | 1,469 | 2010 | B/C(1.2) |
| | 부산지하철1호선 양산연장 건설사업 | 4,959 | 2010 | B/C(0.89) AHP(0.501) |
| |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 2,169 | 2009 | B/C(1.02) |

| 구분 | 사업명 | 사업비<br>(억원) | 신청년도 | 비고 |
|---|---|---|---|---|
| 경북 | | | | |
| 전남 | | | | |
| 부산 | | | | |
| 대구 | 수성의료단지 간선도로 개설사업 | 838 | 2012 | 1.10 |
| 전북 | | | | |
| 전남 | | | | |
| 인천 | | | | |
| 부산 | | | | |
| 충남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br>(농림수산식품부) | 1,132 | 2012 | 0.88<br>0.512 |
| 강원 | | | | |
| 대전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 대구사어언스파크 진입도로 건설사업 | 567 | 2011 | 1.23 |
| 광주 | | | | |
| 경남 | | | | |
| 경북 | | | | |

| 구분 | 사업명 | 사업비<br>(억원) | 신청년도 | 비고 |
|---|---|---|---|---|
| 부산 | | | | |
| 광주 | | | | |
| 대구 | | | | |
| 경기 | | | | |
| 대전 | | | | |
| 경북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대구 | | | | |
| 부산 | | | | |
| 경기 | | | | |
| 인천 | | | | |
| 경북 | | | | |
| 경북 | | | | |
| | | | | |
| 경남 | 부산항 신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사업 | 1,545 | 2010 | 2.76 |
| 인천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토기장 호안조성사업 | 1,876 | 2011 | 3.59 |
| 충북 | 오송역~충북 연결도로 사업 | 1,328 | 2011 | 1.27 |
| 충남 |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br>「국가철도망계획<br>수립연구」(한국교통연구원) | 8,260 | 2012 | 0.97<br>0.524<br>수요검토필요 |
| 세종 |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사업<br>(산림청) | 1,373 | 2011 | 1.26 |
| 세종 | 아트센터(복합도시극장) 건립사업 | 857 | 2010 | 0.91<br>0.514 |
| 대구 | 낙동강살리기 금호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 869 | 2009 | 1,076 |
| 광주 | 영산강살리기 동림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 544 | 2009 | 1.32 |

추진주체 지자체, 예타통과 SOC 제외

<부록 2> 사업계획서 설명자료 제출양식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분야

| ① 사업명 : ○○○사업 |
|---|

1 사업계획(안)

| | | | | |
|---|---|---|---|---|
| ① 사업명 (유형) | | ※ 사업유형 : 도로(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로, 특정지역 지원도로 등), 철도(일반·광역·도시철도 등), 공항, 항만, 수자원 등 | | |
| ② 총사업비 (국고) | | ○○억원<br>(국고:○○ 지방비:○○ 민자:○○) | ③ 사업기간 | ○○년~○○년<br>(○단계 ○년) |
| ④추진주체 | 주관부처 |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 |
| | 지자체·기관 |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 | |
| ⑤ 사업목적 | | | | |
| ⑥ 추진경위 | | ㅇ 추진근거 :<br>-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br>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br>-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 | |
| ⑦ 사업규모 | | ㅇ 사업내용 : 예정부지, 노선 등<br>ㅇ 사업물량 :<br>※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 규모 → 확장 규모 제시 | | |
| ⑧ 사업추진체계 | |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br>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 |
| ⑨ 재원조달방식 | | ㅇ 지원형태 : 융자·보조·정액 지원 등<br>ㅇ 재원분담 : 국고 : 지방비 : 민자 등 구분<br>(사업유형에 따른 별도 분담기준이 있을 경우 제시)<br>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br>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br>*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 | |

1 사업계획(안)

| | |
|---|---|
| ⑩ 사업운영체계 | ○ 운영주체 :<br>○ 운영계획 :<br>※ 완공 후 시설 운영주체 및 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 |
| ⑪ 사전용역 | ○ 조사기관 :<br>○ 조사기간 :<br>○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br>*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br>*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
| ⑫ 사업기대효과 | ○ B/C, 교통난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br>○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br>○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 | |
|---|---|
|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 ○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br>※도로 분야일 경우 현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등급 제시<br>※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br>※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
|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 타 법령에 의한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에 반영여부,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
|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

| 구분 | 동 사업 | ○○사업 (○○부) | ○○사업 (○○부) |
|---|---|---|---|
| 사업목적 | | | |
| 추진방법 | | | |
| 사업규모 | | | |
| 사업위치 | | | |
| 기타 | | | |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 추진방안 등을 기술

3 국고지원의 적합성

| | |
|---|---|
| ① 국고지원 요건 | ○ 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br>○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br>○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
|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br>○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br>○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 소요예산 산출근거
○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계 |
|---|---|---|---|---|---|---|---|---|---|---|
| 정부 | | | | | | | | | | |
| 민간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수 지역균형발전 요인

| | |
|---|---|
| ① 지역낙후도 | ○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
| ② 지역경제 활성화 | ○ 향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 등을 기술 |

6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 |
|---|---|
| ① 민원·분쟁 가능성 | ○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기술 |
| ② 지자체 협의 |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
|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 ○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br>○ 대응방안 |

7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 | 수행기간 | 사업내용 | B/C | AHP | 미통과 사유 |
|---|---|---|---|---|---|
| 1차 | | | | | |
| 2차 | | | | | |
| | | | | | |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 | 신청시기 | 사업내용 | 미선정 사유 |
|---|---|---|---|
| 1차 | | | |
| 2차 | | | |
| | | | |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8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 | |
|---|---|
|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 사업 대상여부 |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br>- 수익형, 임대형 구분 |

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 | |
|---|---|
|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 ○ 법령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해당여부 등을 기술 |

□ 정보화R&D 분야

| ① 사업명 : ○○○사업 |
|---|

1 사업계획(안)

<table>
<tr><td colspan="2">① 사업명<br>(사업유형)</td><td colspan="4">※ 사업유형 : 순수 R&D, 연구기반구축R&D, 복합R&D 중 택일<br>*순수R&D : 기술개발과제로만 구성 / 연구기반구축R&D : 단지조성, 시설 및 장비 구축사업으로만 구성 / 복합R&D : 순수R&D 및 기반구축 R&D가 혼합구성된 사업</td></tr>
<tr><td colspan="2">② 총사업비 (국고)</td><td colspan="2">○○억원<br>(국고:○○ 지방비:○○ 민자:○○)</td><td>③ 사업기간</td><td>○○년~○○년<br>(○단계 ○년)</td></tr>
<tr><td rowspan="2">④추진주체</td><td>주관부처</td><td colspan="4">○○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td></tr>
<tr><td>지자체·기관</td><td colspan="4">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td></tr>
<tr><td colspan="2">⑤ 사업목적</td><td colspan="4">○ 정성적 목표와 함께 현재대비 목표 연도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간략히 제시</td></tr>
<tr><td colspan="2">⑥ 추진경위</td><td colspan="4">○ 추진근거 :<br>-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회의·내부계획 등<br>○ 사전절차 추진내용 :<br>-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기획(연구용역), 수요조사 등 추진절차 및 내용 기재</td></tr>
<tr><td colspan="2">⑦ 사업내용</td><td colspan="4">○ 사업규모 : 기술개발 과제수, 부지, 건물연면적(㎡) 등<br><사업 추진규모>
<table>
<tr><th>세부사업</th><th>사업 내용</th><th>총사업비</th><th>국고</th><th>지방비</th><th>민자</th></tr>
<tr><td></td><td>합 계(억원)</td><td></td><td></td><td></td><td></td></tr>
<tr><td>기술개발</td><td>○○ 분야 기술개발(○개 과제)<br>○○ 분야 기술개발(○개 과제)</td><td></td><td></td><td></td><td></td></tr>
<tr><td>기반구축</td><td>○○센터 구축(연면적, 층)<br>○○단지 조성(연면적, 층)<br>○○장비 구축(수량)</td><td></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인력양성(규모),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 등 규모 요약</td><td></td><td></td><td></td><td></td></tr>
</table>
○ 세부내용 : 기술개발과제내용 및 시설계획, 입지 등</td></tr>
<tr><td colspan="2">⑧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td><td colspan="4">○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br>○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br>*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사후관리방안 등</td></tr>
</table>

| | |
|---|---|
| ⑨ 재원조달방식 | ○ 지원형태 : 출연·융자·보조·정액 지원 등<br>○ 재원분담율 : 국고(회계) : 지방비 : 민자 등<br>- 회계구분 및 재원분담 근거 상세 기술<br>○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완공후 연차소요 및 재원분담주체 등)<br>※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
| ⑩ 사전용역 | ○ 조사기관(수행년도) :<br>○ 용역결과 : 기술성 분석,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br>※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br>※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 ⑪ 사업기대효과 | ※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사업화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시장규모대비 점유율 개선, 대외무역의존도 개선, 수출규모 확대 등 정량적 목표를 현재 대비 제시 |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 | |
|---|---|
| ① 사업추진의 시급성 | ※ 추진 선결절차 등 제반여건의 성숙여부, 국내외 주요환경변화,사업 미추진시 예상 문제점 등을 사업추진시기와 연계하여 기술<br>※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제시 |
|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 중장기 계획(로드맵)·법령 등<br>※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정보화촉진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및 부합성 등 기술 |
|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유사·중복성) | ※ 동 사업(또는 기술)과 관련된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 기술 |

| 구분 | 동 사업 | ○○사업 (○○부) | ○○사업 (○○부) |
|---|---|---|---|
| 총사업비(억원) | | | |
| 기투자액('11년까지) | | | |
| 사업기간 | | | |
| 사업목적 | | | |
| 세부내용 | | | |
| 기타 | | | |

※ 유사 사업 선택은 사업명, 목적, 기술개발대상, 추진방식 및 체계 등이 유사한 사업(타부처 포함)을 자체 선정

※ 세부내용 : 개발목표과제의 세부요소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비교 (세부요소기술과제 비교표 별도 제출)

3 기술개발 필요성(R&D 분야)

| | |
|---|---|
| ① 관련분야 연구개발 투자동향 | ※ 관련 통계 등을 인용한 국내외 정부·민간 투자 동 향 및 추이 상세 기술 |
| ② 관련분야 기술개발 동향 | ※ 국내외 관련분야 특허·논문 및 표준화, 기술발전 단계 등 |
| ③ 기술개발로 인한 파급효과 |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산업기술분야 시장전망, 고용효과 등) 등 |
| ④ 기타 기술 개발 필요성 | |

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 |
|---|---|
| ① 민원·분쟁 가능성 | ○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 기술 |
| ② 지자체 협의 |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 기술<br>※ 연구기반구축사업(단지, 시설, 대규모 장비 등)의 경우, 타 지자체 협의(의견수렴) 유무 및 결과 기술 |
|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 ○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br>※ 관련 법·제도, 국제규범에의 위배가능성 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재원조달 문제 등을 검토, 대응방안 제시 |

수 국고지원의 적합성

| | |
|---|---|
|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 ○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요건 등 기술<br>○ 정부 지원 필요성<br>※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 기술 |
|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반영 여부<br>○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br>○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6 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

① 재원계획

○ 소요예산 산출근거 기술
- 기술개발 과제 단가(샘플과제에 대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 세부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및 기반구축사업 단가(㎡당) 및 산출 근거(NTIS 유사과제참조, 조달청 고시단가, 견적 등)

< 연구개발사업 소요재원 >

(단위: 억원)

| 구분 | | | 총사업비 | | | |
|---|---|---|---|---|---|---|
| 대항목 | 소항목 | | 합계 | 국고 | 지방비 | 민자 |
| 연구개발( %) | | | | | | |
| 연구시설 및 장비 ( %) | 시설 | 공사비 | | | | |
| | | 시설부대비 | | | | |
| | | 부지매입비 | | | | |
| | | 기타 | | | | |
| | | 합계 | | | | |
| | 장비 | 일반 장비 | | | | |
| | | 특수 장비 | | | | |
| | | 합계 | | | | |
| | 합 계 | | | | | |
| 기 타 ( %) | | | | | | |
| 합 계 | | | | | | |

주1) 대항목의 부문별 사업비 비중(%)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반드시 기재
주2)* 공 사 비 : 예산안편성지침의 시설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비 등
* 시설부대비 : 공사비 및 용지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조사비 등 기타 부대비용
* 일반 장비 : NTIS 장비DB에 포함되어 단가분포 정보가 있는 장비
· NTIS장비 DB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제시된 8개 대분류, 48개 중분류, 209개 소분류로 구분한 자료
* 특 수 장 비 : 일반장비와 달리 고가이거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비를 의미, 세부 산출 근거 기재
* 기 타 : 연구개발, 연구시설 및 장비구축 이외의 연구관리, 인력양성 등의 부대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 구분 | 총사업비 | 연차별 투자계획 | | | | | |
|---|---|---|---|---|---|---|---|
| | | '12 | '13 | '14 | '15 | '16 | '17 |
| **합 계** | | | | | | | |
| 국 고 | | | | | | | |
| 지방비 | | | | | | | |
| 민 자 | | | | | | | |

| | |
|---|---|
| ② 소요 인력 등 |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br><연구개발부문 인력투입계획> |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 합계 |
|---|---|---|---|---|---|---|---|---|---|---|---|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 박사급(명) | | | | | | | | | | | |
| 석사급(명) | | | | | | | | | | | |
| 학사급(명) | | | | | | | | | | | |
| 합계(명) | | | | | | | | | | | |

7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 | |
|---|---|
|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 |

| | 수행기간 | 사업내용 | B/C | AHP | 미통과 사유 |
|---|---|---|---|---|---|
| 1차 | | | | | |
| 2차 | | | | | |
| | | | | | |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 | |
|---|---|
|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 |

| | 신청시기 | 사업내용 | 미선정 사유 |
|---|---|---|---|
| 1차 | | | |
| 2차 | | | |
| | | | |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 | |
|---|---|
|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 ○ 법령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해당여부 등을 기술 |

□ 기타 재정부문

| ① 사업명 : ○○○사업 |
|---|

1 사업계획(안)

| | | | | |
|---|---|---|---|---|
| ① 사업명 (유형) | | ※ 사업유형 : ○○분야(사회복지, 교육, 문화, 노동, 환경보호 등) | | |
| ② 중기재정지출 | | ○○억원(융자사업비○○억원)<br>※ 중기사업계획서상 향후 4년간 재정 지출 총액 | ③ 사업기간 | ○○년~○○년<br>(○단계 ○년)<br>또는 지속사업 |
| ④추진주체 | 주관부처 |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 |
| | 지자체·기관 |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 | |
| ⑤ 사업목적 | |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 ⑥ 추진경위 | | ○ 추진근거 :<br>-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br>○ 사전절차 추진내용 :<br>-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 | | |
| ⑦ 사업규모 |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율 또는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br>※ 연도별 지원대상 예상규모 산정내역 등 포함 | | |
| ⑧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 | ○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br>○ 사업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br>※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등을 기술 | | |
| ⑨ 재원조달방식 | | ○ 지원형태 : 출연·융자·보조·정액 지원 등<br>○ 재원분담 : 국가 부담분 외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부담분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제시<br>○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 | |

1 사업계획(안)

| | |
|---|---|
| ⑩ 사전용역 | ○ 조사기관 :<br>○ 조사기간 :<br>○ 용역결과 : 정책적 분석, 경제성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br>*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br>*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
| ⑪ 사업기대효과 | ※ 시장실패 교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 소득 재분배를 통한 형평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br>※ 파급효과(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 |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 | |
|---|---|
|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 ○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종료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br>※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br>※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
|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의 반영여부 및 이들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기술 |
|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

| 구분 | 동 사업 | ○○사업 (○○부) | ○○사업 (○○부) |
|---|---|---|---|
| 사업목적 | | | |
| 추진방법 | | | |
| 지원분야 | | | |
| 지원대상 | | | |
| 기타 | | | |

※ 동 사업과 관련된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3 국고지원의 적합성

| | |
|---|---|
|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 ○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br>○ 정부 지원의 필요성<br>※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
|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br>○ 사업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부담의 규모<br>○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 | |
|---|---|
| ① 소요 예산 | ○ 소요예산 산출근거<br>○ 예산확보방안<br>(예시) <소요 예산><br>(단위: 억원) |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 계 |
|---|---|---|---|---|---|---|---|---|---|---|---|
|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 중앙정부 | | | | | | | | | | | |
| 지방정부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사업에 소요되는 중기재정소요액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함

| | |
|---|---|
| ② 소요 인력 등 |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수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 |
|---|---|
| ① 민간부문 협조시 문제점 | ○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운영, 관리와 감독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기술 |
| ② 지자체 협의 |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
|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 ○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br>※ 관련 법·제도 위배가능성, 사각지대의 존재 가능성, 향후 민간부문과의 경합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응방안 제시 |

6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 | |
|---|---|
|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 <table><tr><th></th><th>수행기간</th><th>사업내용</th><th>B/C</th><th>AHP</th><th>미통과 사유</th></tr><tr><td>1차</td><td></td><td></td><td></td><td></td><td></td></tr><tr><td>2차</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br>※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
|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 <table><tr><th></th><th>신청시기</th><th>사업내용</th><th>미선정 사유</th></tr><tr><td>1차</td><td></td><td></td><td></td></tr><tr><td>2차</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br>※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 | |
|---|---|
|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 ○ 법령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해당여부 등을 기술 |